

통계야 놀자

통계를 알면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발행처 국정홍보처 www.korea.kr

발행인 김창호

발행일 2006년 10월 30일

제작협력 (주)굿앤파트너즈 Good & Partners

인쇄제본 (주)지성기획인쇄

발간등록번호 11-1110050-000086-01

내용문의 통계청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042-601-4402)

배포문의 국정홍보처 간행물팀(02-2100-2987-8)



통계청 앞면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일러두기

‘진실의 거울’

정보가 광속으로 이동하는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가가치 높은 정보의 입수는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고 은연 중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국가통계는 우리 삶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비춰주는 ‘진실의 거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 라고 하면 숫자로만 이뤄진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프로 보여주면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지만, 사실 네모난 표에 뻑뻑하게 들어찬 숫자는 누구나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알고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통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미건조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의 모습, 변화 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통계 속에 숨은 속뜻을 알아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회를 진단하거나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또 통계를 잘 활용한다면 상품의 판매 실적이나 미래 수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는 세상을 재볼 수 있는 잣대가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통계를 활용한 ‘대박신화’의 성공이 이를 반증합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 전국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소주를 비롯해 1인 가구수 증가를 적용한 햇반, 해외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신제품 개발에 적용한 튜브형 고추장 등은 국가통계를 사업영역에 응용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통계는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준이나 방법, 분석 대상 등의 오류로 인해 종종 왜곡되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잘난 점과 못난 점을 그대로 보여줘야 할 통계가 진실이 감춰진 채 전혀 다른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기도 합니다.

잘못 해석된 통계는 국민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고, 오해를 불러와 결국 일상생활을 혼돈케 합니다. 또 개별 기업의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성장발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선 통계를 분석할 때 자주 혼돈되는 국가통계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국가통계를 접할 때 꼭 유념해둬야 할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국가통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가통계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 오류 사례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수록, 정확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제·교육·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40여 개의 국가통계를 해설자료와 함께 수록,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국가통계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숨김없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투영해주는 국가통계는 부풀려서도, 감춰져서도, 왜곡되어서도 안됩니다. 미래 선진한국으로 이끌 방향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례



일러두기

'진실의 거울' 6

제1장

문답으로 풀어보는 국가통계

국가통계란 뭘까?	12
경기지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15
체감물가와 지표물가는 왜 다를까?	17
국가통계는 왜 저마다 다를까?	20
경기동향은 어떻게 파악할까?	21
전월비 증가율과 경기상승세는 어떤 관계?	23
경기가 좋을 때와 경기가 나쁠 때	25
기저효과란 뭘까?	28
소비활동 수준을 알려주는 국가통계	29
국가통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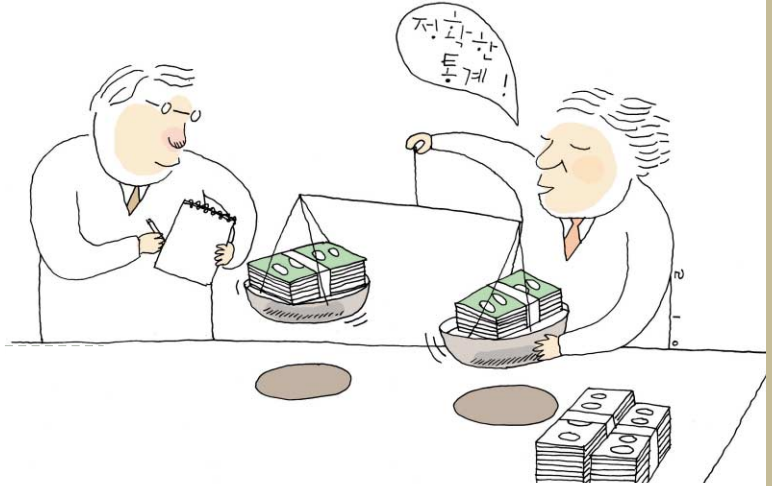


제2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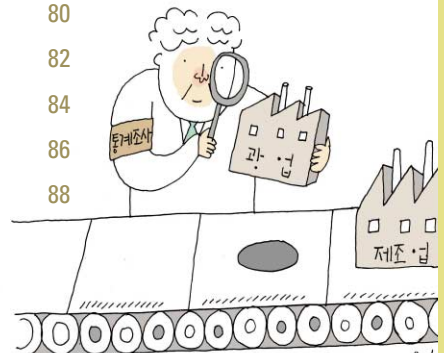
한국의 실업률 12.8%?	36
변화 반영 못하는 산업통계?	37
부부 100쌍 중 47쌍이 갈라서는 대한민국?	38
따로 노는 경기지표?	39
상·하위 근로 소득 격차가 44배나 된다는데?	40
정부 통계가 오락가락 한다는데?	41
빈곤층 자산이 월 46만 원씩 준다?	42
소득 상위 20%의 '공적지출' 이 역대 최고라고?	43
책값 지출 '제로' 수준?	44
통계청 통계는 믿을 게 못된다?	45





**제3장
통계로 본 국정**

경제성장률 경기종합지수	48
경상수지 수출입	50
소비자물가 취업자수·실업자·실업률·청년실업률	52
외환보유 IMD, WEF 재정건전성	54
외국인 직접투자 주택보급	56
임대주택 인구 1,000명당 주택수	58
농가소득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60
IMD 과학·기술경쟁력 정보격차	62
초고속인터넷 IT산업 수출입	64
IT산업 인력 소득분배(Gini계수)	66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68
국민연금 합계출산율	70
일반고용	72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일수 교원 1인당 학생수	74
IMD 교육경쟁력 학자금 대출	76
여성의 경제활동 UNDP 남녀평등지수	78
문화산업 수출 문화산업 고용	80
남북 교역 남북 인적교류	82
수도권 집중 - 인구 수도권 집중 - 업체	84
지역내총생산(GRDP) UN 전자정부지수	86
행정정보 공개	88



제1장

문답으로 풀어보는 국가통계

통계 속에 숨은 속뜻 찾기



대부분 사람들은 '통계' 하면 숫자로만 이뤄진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그래프로 보여주면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지만, 사실 네모난 표에 뻑뻑하게 들어찬 숫자는 누구나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통계는 알고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다. 통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미건조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의 모습, 변화 등을 읽어낼 수 있다. 또 통계 속에 숨은 속뜻을 알아내는 즐거움도 있다.

자주 언급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질문내용을 열 가지로 정리했다.

국가통계란

뭘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통계(statistics)를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글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물가·실업률 등을 참고하기도 한다. 통계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떠한 현상을 숫자로 표현한 자료(data)라고 할 수 있다.

국가통계는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

모든 통계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중앙은행·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생산되는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생산하는 국가통계는 국가 또는 일정 지역의 경제·사회·인구·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 공식 자료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평가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통계는 기업은 물론 개인의 각종 투자 시기와 규모, 영업전략 선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기업이나 개인의 일상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어디까지가 국가통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경제·사회·인구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통계제도는 크게 집중형 제도와 분산형 제도로 나뉘며, 나라마다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한 나라의 대부분 통계활동을 전문화된 한 기관에 집중시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로 캐나다·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각 기관에서 스스로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일본·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 채택

집중형 통계제도는 필요한 모든 통계를 한 기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가 중복 작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통일된 자료 수집 및 처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작성 통계의 질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숙련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자원의 집중적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는 해당 기관에서 통계를 직접 작성하므로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된 통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기관으로는 국가 통계행정을 종합 관장하는 통계청이 있으며, 농림부·노동부·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고유 업무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서도 주민등록인구 작성, 통계연보 편집 등의 지역 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통계기관 이외의 통계작성기관으로는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있다.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 생산은 물론 국가통계에 대한 조정, 통계 작성 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은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 조사항목은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평가와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조사주기는 5년이다. 참고로 세계 인구는 2004년 7월 1일 현재 63억7,800만 명(세계추계인구, UN 자료)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계조사

가계의 경제 상태 및 생활수준 변동 상황 파악을 위해 가계수입과 가계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는 것. 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비생활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한편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국가 기본통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국가통계의 조정, 통계 작성의 기준 설정, 통계 정보의 종합 관리와 통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교육원·통계개발원을 운영해 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통계기법을 연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 작성 땀 통계청장 승인 얻어야

분산형 통계제도 아래에서 여러 통계작성기관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통계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 통계를 이용하는 정부나 기업, 개인 등의 의사결정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한 판단의 오류는 결국 국가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국가통계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통계의 일관성과 생산 등을 위해 통계법에 따라 미리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 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보급되는 국가통계는 일반적으로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정부 승인통계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10월 현재 통계법에 근거해 작성된 정부 승인통계는 153개 기관에서 생산하는 673종으로 이 중 정부 기관이 작성한 통계는 514종, 통계작성 지정기관인 한국은행 및 각종 공사·공단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59종에 이른다.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와 산업총조사·서비스업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물가조사·가계조사* 등 모두 54종의 국가 기본통계를 작성한다.

휴대폰은 필수?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 당시에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휴대폰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었다. 초창기에 아이들 팔뚝만한 휴대폰을 들고 고급 승용차 옆에서 보란 듯이 통화하는 모습은 당시 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초등학교생들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게 됐다. 서비스가 시작된 1984년에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전국에 겨우 2,730여 명에 불과했는데, 2005년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800만 명으로 늘었다.

경기지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의 총체적 움직임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게 수치로 표현한 것이 경기지표이다. 정부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를 매월 종합하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지표에는 한 달간 이뤄진 산업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생산지표인 산업생산지수·서비스업활동지수와 소비지표인 도소매 판매액지수, 투자지표인 설비투자 추계지수 등을 포함한다.

소비부분의 경기를 종합한 소비재 판매액지수와 관련, 모든 산업 중 극히 일부분인 개별산업만을 언급하면서 전체 통계가 틀린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 판매액지수가 비중이 큰 산업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종합적 경기지표를 일부 비중이 작은 사양 산업의 경기와 비교해 마치 전체의 경기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을 분석할 땐 그에 맞는 통계지표 사용해야

예를 들어 7신문의 보도내용 중 ‘소비재 판매액 증감률’과 ‘서울 남대문시장 추석 매출액’ ‘슈퍼마켓 체감경기’ 등을 비교하면서 통계지표들이 혼동된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부분적 소비동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재 판매액 증감률’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소매업체별 판매액 지수’ 중 ‘기타 소매점(재래시장 포함) 판매액 증감률’이나 ‘슈퍼마켓 판매액 증감률’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즉, 조사대상, 작성목적, 작성대상기간 등을 감안할 때 양 통계

경기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또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란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실물 부문(생산·고용 등), 금융 부문(통화량·금리 등), 대외 부문(수출·수입) 등의 활동을 총망라한 거시경제지표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즉, 경기가 좋다는 것은 추세수준(거시경제지표들의 평균적 개념) 이상의 경제 성장과 생산 증가가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추세수준보다 낮거나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타날 때는 경기가 나쁘다고 한다.

지수

지수는 같은 종류의 통계자료를 분석, 대소 관계를 비율 형태로 표시한 것. 지수를 작성하는 목적은 비교하기가 쉽고,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된 것을 동일한 단위로 집계하기 위해서이다. 지수에는 금액 지수·수량지수·물가지수 등이 있다.

통계상식

소비재 판매액 동향



	2004. 7월	2005. 4월	5월	6월	7월
소비재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	0.3	2.9	3.6	3.5	4.9
· 기타소매점	1.3	2.0	1.2	0.1	-1.3
· 슈퍼마켓	-9.6	-0.1	0.8	-0.6	1.2

* 슈퍼마켓 누계비 2003년(0.8%), 2004년(-7.1%), 2005년 1~7월(-1.3%)

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로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통계지표와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자료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보도에서는 소비재 판매액 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소비동향 중 하나인 ‘서울 남대문시장 주석 매출액’을 전체 소비동향인 ‘소비재 판매액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또 있다. ‘서비스업 판매액 증감률’과 ‘서울 D도너츠가게 하루평균 손님수’ ‘Hits집 등 음식점업 체감경기’ ‘동해안 콘도운영업 체감경기’를 서로 상호 비교해 통계들이 잘못됐다고 보도한 것. 이 경우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업 동향을 나타내는 ‘서비스업 판매액 증감률’ 보다는 ‘서비스업활동지수’* 중 ‘음식점업 판매액 증감률’ ‘콘도운영업 판매액 증감률’을 비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거시경제지표란?

국민소득·물가수준 등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제지표. 미시경제가 각 개별 경제주체의 활동이 대상이라면 거시경제는 각 경제주체의 합을 대상으로 한다. 즉, 미시는 옷값·지하철 요금 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거시는 ‘물가’라는 개념으로 합쳐진다.

체감물가와 지표물가는 왜 다를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과 물가지수 작성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각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차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의 괴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와 객관적으로 평균화해 발표하는 공식 물가지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주부·학생 등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분야와 생활양식이 다르고 그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품목과 가격도 다르기 때문이다.

체감물가는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

예를 들면, 같은 시점에서 대학등록금은 많이 올랐으나 기술발전 등으로 텔레비전·냉장고 등 가전제품 가격이 하락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비 부담 증가로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반면 전자제품을 구입한 가정은 물가가 내렸다고 느낄 것이다.

이는 물가지수가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반면에 체감물가는 상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물가지수가 숲의 전체를 보고 숲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체감물가는 숲의 일부만 보고 숲을 말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생활수준 향상이나 자녀의 성장 등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가령, 소득이 높아져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대형으로, 자동차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아파트 관리비·가전제품 구입비와 전기료·자동차 보험료·기름값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자녀의 학원비와 식비·용돈 등 생활비가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물가는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사람들은 적게 오르거나 가격이 하락한 품목보다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상승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또 물가가 안정돼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나 증권시세가 급격하게 오른 경우 심리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느낀다.

보조지표 눈여겨보아

이러한 주관적 심리적 요인 외에도 물가지수 작성방법상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도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 물가지수는 5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하고 가중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소비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경우에는 이를 제때에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웰빙(well-being)붐으로 가정의



세계 각국은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의 괴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에 보다 근접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소비지출 중 문화오락 서비스와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식 물가지수에서는 가중치가 고정돼 있어 이러한 것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 때문에 체감물가와 물가지수 사이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체감물가와 물가지수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반서민들의 장바구니물가에 보다 근접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함께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신선식품지수

농수산물 중 조기·갈치·무·열무·사과·배·마늘·생강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따로 조사해 집계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어개·신선채소·신선과실·기타 신선으로 구분되며, 체감물가 파악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문제풀이-통계상식

1. 2004년 7월 현재 세계 인구는?
①약 100억 명 ②약 55억 명 ③약 64억 명 ④약 70억 명
2. 2004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①약 880만 대 ②약 1,050만 대 ③약 1,370만 대 ④약 1,500만 대
3.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씨는?
①김 해 김씨 ②필 양 박씨 ③전 주 이씨 ④경 주 최씨
4. 2003년 현재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①림 어업 ②광 공 업 ③전 설 업 ④도 소매·음식숙박업
5.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란?
①13세 이상 ②15세 이상 ③17세 이상 ④18세 이상

※정답은 책 속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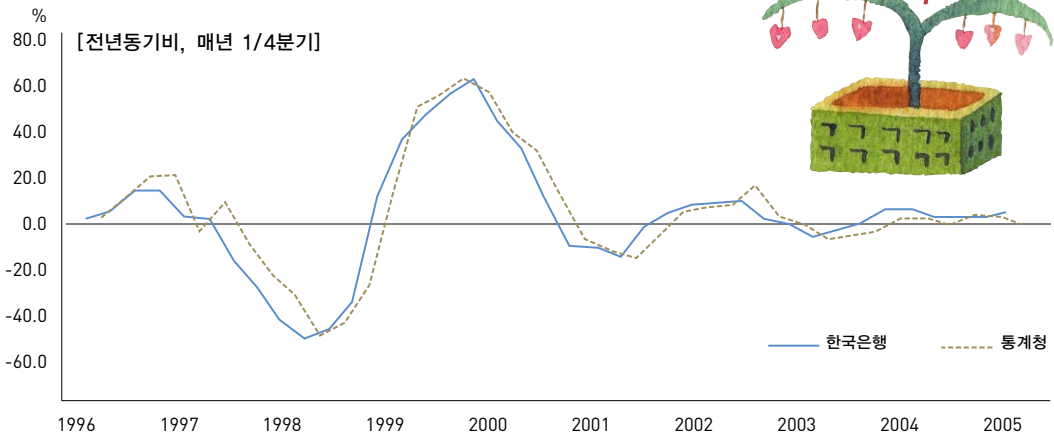
국가통계는

왜 저마다 다를까?

설 비투자 관련 통계 중 통계청의 설비투자 추계지수와 한국은행 국민계정상의 설비투자 통계와 같이 내용은 유사하더라도 작성목적이 다를 경우 두 통계는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통계청의 설비투자 추계지수는 월별통계로 설비투자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지표는 분기통계로 국민계정 추계과정의 한 부문(GDP의 지출항목)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통계는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다. 하지만 두 통계의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설비투자 추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통계청은 선박 등을 제외한 63개 부문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75개 부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또 기초 자료 분야에서 통계청은 통관기준 수출입액을, 한국은행은 국제수지기준의 수출입액을 이용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

○ 한국은행과 통계청 설비투자지표 비교



경기동향은 어떻게 파악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지표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동월(기)비와 전월(기)비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년동월비란 전년도 같은 월과 비교한 증가율에 의한 분석 방법으로 전년동월 이후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누적해 나타내기 때문에 전년에 대한 비교년의 평균적인 변화속도를 보기 위해 작성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

전년동월비는 원계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원계열이란 사업체·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총합(또는 평균치)하거나 지수 형태로 표현된 통계를 말한다. 즉, 일정한 간격(월·분기)으로 작성된 시계열* 자료이다.

경기동향은 전년동월비와 전월비로 파악

특히 원계열은 ‘추세+순환+계절요인+불규칙요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원계열끼리 비교한 전년동월 증가율은 계절요인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올해 계절요인이 전년도 계절요인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월동월비는 전년동월 또는 금월의 불규칙한 요인 때문에 해석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년동월비를 해석할 때는 전년동월 또는 비교 달의 파업·조업일수·명절요인·장마 등 불규칙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파업이나 명절효과 등의 불규칙

시계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관측된 관측값의 계열. 동일한 시간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계열은 대개 4개의 성분(추세·계절·순환·불규칙 성분)으로 구성된다.

$$\text{전년동월비(\%)} = \frac{\text{금월} - \text{전년동월}}{\text{전년동월}} \times 100$$

요인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다음달에 만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개월 평균치로 추이를 비교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전월동월비와 함께 통계분석에 자주 쓰이는 전월비는 단기적 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 지표이다.

통계 이용자 입장에서도 지난 1년 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직전 월의 경기가 어떤지 비교하는 것이 체감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 특히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전년동월비로는 구조 변화 부분만큼 상향 혹은 하향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해석이 어렵지만, 전월비 추세로 동향을 파악한다면 훨씬 유리하게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text{전월비}(\%) = \frac{\text{금월} - \text{전월}}{\text{전월}} \times 100$$

이와 같이 전년동월비와 전월비의 쓰임은 다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전혀 의미가 다른 소비재 판매의 전월비와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동월비를 동등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즉, 전월비와 전년동월비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님에도 이들을 억지로 꺾어 맞춰 통계를 왜곡시킨 것이다.



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2005. 10월	11월	12월	2006. 1월
소비재 판매 전월비(계절조정, %)	-0.3	2.9	3.0	-3.9
소비재 판매 전년동월비(불변, %)	3.7	6.8	9.6	9.4

우리나라 최초의 대졸 여사원 공채는?

최초의 여사원 공채는 1986년 11월 대우그룹에서 이뤄졌다. 여성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인문계 100명, 이공계 100명으로 총 200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였다. 당시 처음은 대졸 남자 초임이 32만 원이었던 반면 대졸 여자 초임은 30만 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근무 시간은 일반 직원과 동일했고, 결혼 후에도 근무를 원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었다. 참고로 2003년 현재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소매·숙박업으로 585만2,000명이며, 광공업(422만2,000명), 건설업(181만6,000명), 농림어업(196만 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전월비 증가율과 경기상승세는 어떤 관계?

2006년 4월 27일자로 발행된 **나** 일간지는 ‘3월 산업생산 0.9% 증가 그쳐’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전월비 0.9% 그쳐 경기상승세 주춤하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산업생산지수* 등 월별 산업동향 통계를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단기적 경기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경기의 흐름은 1년 단위(전년동기비)보다는 월 또는 분기 단위(전기비)로 보는 것이 경기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더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0.9%에 그쳐’ 라는 표현은 속도만 강조한 것으로 ‘경기의 흐름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방향

산업생산지수

단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광업·제조업·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현황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 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산업별 생활동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경기동향까지도 엿볼 수 있다.

3월 산업생산 0.9% 증가 그쳐

<전월대비>

통계청 산업동향... 선행지수 두달째 마이너스 소비재 판매는 1.1% 늘어 석달만에 상승세로

경제의 전반적인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이 3월들어 전월과 비교해 0.9% 늘어나는데 그쳐 경기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의 경기극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4% 포인트 하락,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여 올 연말이나 내년초를 고비로 경기가 하강극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6년 3월 및 1분기(1-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과 비교해 0.9% 늘어났다. 2월(-4.4%)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상승폭은 미미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10.0% 늘어나 2월(20.6%)에 비

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1분기(1-3월) 전체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해 지난해 4분기(5.5%)에 비해 상승폭이 약화됐다.

민간소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재판매는 전월대비 1.1% 증가, 3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승용차와 혼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통계청은 분석했다.

설비부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운수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했지만 미래의 투자수요를 반영하는 국내기계수주는 지난해 3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건설부자는 이미 이뤄진 건설투자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이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 2월(9.2%)에 비해 둔화됐고 6개월-1년 후의 건설수요를 반영하는 국내건설수주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34.5% 감소,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특히 경기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경기총합지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쳤고 미래의 경기상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광섭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견제하고 "(그러나) 경기선행지수가 8-15개월 정도 실행경기에 선행한다고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경기가 꺾임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 중요하다' 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경제는 연간 경제운용계획을 연말 또는 연초에 수립해 경제를 운영하고, 매월 경제지표를 확인해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즉, 전년동기비·전기비에 의한 연율로 계산해 연간성장률 달성을 예상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 중 '전월대비 0.9% 증가'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 연율로 환산할 경우 11.4%이며, 이를 전년도 산업생산증가(6.3%)와 비교해보면 훨씬 높은 성장도표를 그리게 된다. 물론 전기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석방법인 전년누계비·전년동기비 등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곧 일부 지표만으로 전체의 경기를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이다.

2006년 1/4분기 역시 전분기대비 3.1% 증가(연율로 환산시 13.0%에 해당)를 기록해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의 통계수치에서 보듯 3월 산업생산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생산 증가세 둔화'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 산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비·전기비·전기비연율 비교

	[단위 : %]		
	2005. 4/4분기	2006. 1/4분기	3월
전년동기비	10.3	12.0	10.0
전기비	5.5	3.1	0.9
(전기비연율)	23.9	13.0	11.4

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0세 이상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7시간 49분), 식사 및 간식시간(1시간 37분), 개인 유지(1시간 8분) 등 개인 필수 활동을 위해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34분(44%)을 활용한다.

또 일(3시간 26분), 가사노동(1시간 52분), 학습(1시간 14분), 출퇴근(1시간 40분) 등 8시간 13분(34%)을 의무적인 활동에 투입하며, 미디어 이용(2시간 19분), 교제(52분), 취미(59분), 기타(1시간 3분) 등 5시간 13분(22%)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한다.

경기가 좋을 때와

경기가 나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보통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거나 수익성이 나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말하고, 개인은 소득이 많아지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 또는 집값이 오르면 경기가 괜찮다고 말한다.

이렇듯 개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는 각자가 처한 여건과 판단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들로 구성돼 있는 국민경제를 주관적 성향이 강한 개별주체들의 경제활동 차원에서 판단해 경기를 짐작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기순환은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 미쳐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활발히 움직인다. 즉,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 내놓은 제품의 판매 정도에 따라 시설투자와 고용확대를 결정하게 되고, 가계 역시 소득 증가 여부에 따라 소비활동의 정도를 가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와 생산·투자가 서로를 부추기며 활발하게 돌아가는 선순환 상태를 일러 '경기가 좋다' 라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소비 및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팔려 나가는 상품의 양이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활동과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생산활동이 둔화되면 일자리와 일거리가 감소해 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저조한 소비가 부진한 생산, 투자·고용과 맞물려 나타나는 악순환의 경기 상태를 '경기가 나쁘다' 고 한다.

즉,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고용과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하강 국면에서는 생산이 활발하지

못해 고용과 소비지출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경기의 흐름은 각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경기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기업 역시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생산 및 시설투자를 그르치게 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국민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만 소비와 저축 등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의 경제활동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자국 내의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나라 밖의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경기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변동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순환

경제활동은 상승(확장)과 하강(수축)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같이 경기가 일정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변동하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경기순환이라고 말한다. 순환 과정은 확장기와 수축기의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확장기를 회복기와 활황기로, 수축기를 후퇴기와 침체기의 4단계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경기 상승, 오랜 기간 서서히 나타나

그렇다면 어떻게 경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 중심에 경기순환*이 있다. 경기순환이란 경제활동의 순환적 변동을 의미하는데, 그 순환과정을 경기변동이라 일컫는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경제활동이 활발해 경기가 상승하면 마침내 정점에 도달한 후 경제활동이 부진해 경기가 하강하면 저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상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설정시점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저점	정점
제1순환기	1972. 3	1974. 2	1975. 6	23	16	39	81. 3월	81. 3월
제2순환기	1975. 6	1979. 2	1980. 9	44	19	63	81. 3월	84. 3월
제3순환기	1980. 9	1984. 2	1985. 9	41	19	60	84. 3월	88. 7월
제4순환기	1985. 9	1988. 1	1989. 7	28	18	46	88. 7월	91. 9월
제5순환기	1989. 7	1992. 1	1993. 1	30	12	42	91. 9월	97. 2월
제6순환기	1993. 1	1996. 3	1998. 8	38	29	67	97. 2월	99. 2월
제7순환기	1998. 8	2000. 8	2001. 7	24	11	35	01. 3월	03.11월
제8순환기	2001. 7*	2002. 12*		17			06. 2월	06. 2월
평균	-	-	-	31	18	50		

※ *잠정 **순환기의 시작 저점

승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경기의 저점(정점)에서 다음 저점(정점)까지의 기간을 경기의 주기라고 하고,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를 경기의 진폭이라고 부른다.

경기변동의 특징은 경기가 순환하면서 많은 경제변수들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질 GDP가 증가하는 상승 국면에서는 실업이 줄고, 반대로 실질 GDP가 감소하는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이 증가한다.

경기 하강, 짧은 기간내 빠르게 진행

이러한 관련성은 실질 GDP와 실업뿐만 아니라 소비·투자·임금·물가, 그리고 이자율 등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하강 국면에서는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과 임금 소득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며, 주식가격과 이자율 하락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1970년 이래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중 순환주기가 길 때는 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이 67개월이었던 반면 짧은 때는 순환주기가 35개월에 그친 적도 있다. 또한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상승 국면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지만,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하강 국면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는?

자동차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였다. 특히 '1집 당 자가용 1대 소유'는 생활의 목표였다. 그러던 2003년 4월, 드디어 우리나라에 등록된 승용차가 1,000만 대를 돌파했다. 고종 황제가 최초로 자동차를 도입한 이후 정확히 100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2006년 7월 현재 전국 자동차 등록대 수는 1,500만 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 공간에서의 경쟁을 불러왔다. 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암체족 끼어들기,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운전자들,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차전쟁...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점점 고역스러운 일이 되어 가고 있지만, 자동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즐기치게 늘어나기만 한다.

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기저효과란

뭘까?

기저효과란 전년동월비를 계산할 때 비교대상 월의 기준인 전년동월 지수수준의 높고 낮음과 이에 따른 전년동월비 증가·감소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하는 달의 파업·조업일수·명절요인·이상기후 등 불규칙요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앞에서 언급된 불규칙요인들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업이나 명절 등 불규칙요인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다음 달에 만회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개월 평균치로 추이를 비교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기저효과는 전년 동월비 증감 현상

전년에 비해 현재의 경기 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산업활동의 변동 방향과 속도가 어떠한지를 측정할 때는 같은 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계를 해석하는 데는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동월비로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설비투자의 경우, 설비기계류의 수입규모에 따라 증감폭이 크게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의 추이를 계산한 이동평균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동평균법

시계열 자료의 경향을 보기 위해 월을 이동시키면서 평균하는 방법으로 3개월·12개월 등 다양한 개월수를 선택해 평균할 수 있다.

☉ 설비투자 추계지수의 전년동월비와 3개월 이동평균비 비교



	2004. 12	2005. 1	2	3	...	12	2006. 1	2	3
설비투자 추계지수	101.8	96.3	95.6	95.6		114.6	96.4	97.9	122.4
전년동월비(%)	-1.7	15.5	-3.7	1.9		12.6	0.1	2.4	9.6
3개월 이동평균비(%)	0.2	5.0	2.6	3.9		7.0	6.5	5.2	4.3

소비활동 수준을 알려주는 국가통계

가 계소비지수란 소비활동의 주체인 소비자(개인) 가구원들의 소비지출을 뜻하며, 서비스활동지수란 주요 소비 대상인 대형할인점·음식점·호텔 등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업체의 판매 또는 매출액 현황을 일컫는다. 이를 곧 소비동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소비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상 금액의 소비 지출액인 가계수지통계보다는 부가가치 가중치를 이용한 생산액 지수인 서비스업활동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다만, 포괄범위에 있어 가계수지통계에는 해외에서 지출되는 해외연수비·개인에게 지출되는 개인교습비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활동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게임·교육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국가통계는 들쭉날쭉

매출액과 지출만 조사할
의미없는 '반쪽통계' 탓
"문제 있지만 인력부족"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및 게임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통계청이 내놓는 국가 통계에서 이 분야의 통계는 들쭉날쭉이다.

19인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출액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보통교육비는 2000년 7천4천7백36원이던 것이 2005년 15천672원으로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지에 나타나는

보통교육비는 통계청이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액을 조사한 것이다.

반면 같은 통계청이 내놓은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2005년 학원들의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126.8(2000년 100 기준)에 그쳤다. 2000~2005년 사이에 26.8% 증가에 그쳤다는 얘기다. 이 지수는 통계청이 생산자인 학원을 대상으로 통계조사한 결과만을 반영한 것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교육이나 게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조사되지 않 온라인 업체들의 매출총액은 조사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업체 가운데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는 업체만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게임의 경우에도 온라인 비용이 포함된 가계수지상의 교양오락 서비스비는 2000년 3만7천2백34원에서 2005년 5만4천2백62원으로 45.7%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활동 동향의 기타오락산 업지수는 2000년 100에서 지난해 112.8로 12.8% 늘는 데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게임 등 관련산업이 최근 몇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지

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서비스업 활동 조사에서는 빠진 채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통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어우릴 심상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국가 통계(서비스업 활동 통계)를 계속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는다.

한편 통계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시중규모를 파악한 뒤 시험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통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ㄷ일간지의 보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수지통계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활동지수 등 상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통계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오류를 발생시킨 좋은 사례이다. 유사한 명칭이나 유사한 내용의 통계라고 하더라도 작성목적이 다르면 그 통계가 전혀 다르게 작성될 수 있고, 조사대상과 조사규모·조사시기 등이 다를 경우도 서로 상이한 통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통계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ㄷ일간지는 가계수지동향을 보도하면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보충교육비가 2000년 7만4,736원에서 2005년 15만62원으로 100.8% 증가한 데 반해 학원의 서비스업활동지수는 2000년 100.0에서 2005년 126.6으로 불과 26.6% 증가에 그쳐 차이가 크다고 비교했다. 이어 ㄷ일간지는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온라인 교육이나 게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내역은 파악되지만, 온라인 업체들의 매출동향이 조사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도시근로자가구 보충수업비와 학원 서비스업활동지수 비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도시근로자가구 보충수업비(원)	74,736	82,260	89,300	125,716	136,982	150,062
서비스업 활동지수 (학원/경상)	100.0	107.3	120.1	133.0	128.2	126.6

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씨는?

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김씨가 총 인구 중 21.6%인 992만5,949명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씨가 679만4,637명(14.8%)으로 2위를, 박씨가 389만5,121명(8.5%)으로 3위에 올랐다. 최씨는 216만9,704명(4.7%)으로 4위, 정씨는 201만 117명(4.4%)으로 5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임씨, 오씨 순으로 나타났다. 본관별로는 김해 김씨가 412만5,000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밀양 박씨가 303만1,000명으로 2위, 전주 이씨가 261만 명으로 3위, 경주 최씨는 173만7,000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국가통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사 회가 급속하게 변화·발전함에 따라 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통계의 이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PC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간행물 등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서비스가 보편화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통계정보를 정확·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know where”.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숨어 있는 길을 손쉽게 찾아가 보자.

e-나라지표시스템(www.index.go.kr)

e-나라지표시스템은 국정 모든 분야에 걸친 통계를 총망라한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물론 추이와 생생한 통계의미 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전문가·정책결정자 모두에게 국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e-나라지표시스템에서는 국가 공식 승인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현황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가공한 내용도 서비스하고 있다. 시계열(통계숫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통계) 자료를 통해 정책 결과의 변동 현황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도식화해 쉽게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지표에 대한 분석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e-나라지표시스템은 2006년 9월부터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 책 제3장의 주요 통계는 e-나라지표시스템에서 발췌한 것이다.

통계정보시스템 (KOSIS, <http://kosis.nso.go.kr>)

통계정보시스템 KOSIS는 통계청이 운영하는 통계DB이다.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는 50여종의 통계를 포함해 약 1억 계열의 통계자료가 수록돼 있다. 국토·기후,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등 주제별 검색과 조사별 검색이 가능하며, 전문가를 위한 전년동월비 증감률·전월비 증감률 등 유용한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분산형 통계체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모든 국가통계가 KOSIS에 수록돼 있지 않아 원하는 통계를 한 곳에서 다 찾을 수 없으나, 국가통계통합DB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즈음에는 이러한 불편함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시자료제공시스템 (MDSS, <http://mdss.nso.go.kr>)

‘사회구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논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학자나 연구원들은 사회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가설을 세운 후 데이터를 통해 검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직접 조사·수집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MDSS서비스는 개인이나 특정 사업체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기본통계 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별 조사자료의 일부를 연구목적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직접 원시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용



“Know where”. 국가통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왼쪽부터 e-나라지표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원시자료제공시스템,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자료를 직접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DSS서비스는 기존 주문형 위탁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한층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지리정보시스템(<http://gis.nso.go.kr>)

숫자로만 보는 통계는 지루하다. KOSIS(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간’의 개념을 추가했다. 인구·사업체수 등 각종 지역 통계자료를 행정구역 경계 등 지리정보와 연계해 지도 위에 색채나 그래프로 통계정보를 수록했다.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통계지도를 검색할 수 있어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통계수치를 시도·시군구 등 행정구역 별로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지역간 비교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위 바위 보의 비밀

가위 바위 보는 사람 숫자가 늘수록 승부가 나질 않는다.

둘이서 승부가 날 때까지 가위 바위 보를 했을 경우 평균 횟수는 1.5회. 이 때 첫 번에 승부가 날 확률은 66.67%이지만 네 명으로 늘어나면 1.93회로 51.85%, 10명이면 19.26회로 5.19%, 자꾸자꾸 승부가 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20명이 가위 바위 보를 할 경우는 어떨까? 승부가 날 때까지의 평균 횟수는 약 1,108회다. 더구나 한 번에 승부가 날 확률은 겨우 0.09%에 불과하다.

* 참고문헌 : 다나카 요시아쓰 「신기한 확률 재미난 인생」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제 2 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통계의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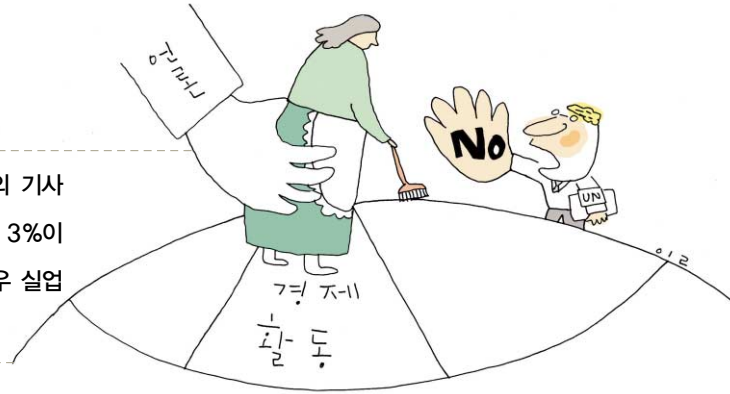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문이나 방송, 책자 등을 통해 수많은 통계를 접하며 살아
가고 있다. 사망률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는 뉴스를 듣는가 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실업률이 줄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등 통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분석기준이나 방법, 분석 대상 등이 서로 다른 통계들을 상호 비교함으
로써 통계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통계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통계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
본다. 여기서 발행일자와 해당 언론사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한국의 실업률 12.8%?

◆ 보도내용

‘한국의 실업률 3.6%인가, 12.8%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업주부를 실업자에서 제외할 경우 실업률은 3%이지만, 전업주부를 절반 정도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은 12.8%가 된다’고 보도



◆ 사실은

실업통계는 모든 나라가 ILO(국제노동기구)의 국제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해 작성한다. 즉, 취업자는 지난 1주일간(조사대상 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말하고,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으나, 일자리를 찾아봤던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ILO가 취업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총생산에 기여한 모든 노동투입량(취업)을 파악하고, 단기노동·일시노동과 기타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취업을 포괄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가사에 종사하는 전업주부나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한다. 반대로 일을 못한 채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실업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해당 언론은 육아·가사를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활동은 UN이 정한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기여한 것(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한 활동)만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가사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가사활동을 경제활동(특히 실업자)으로 봐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상으로 맞지 않는다.

변화 반영 못하는 산업통계?

◆ 보도내용

‘산업통계 변화 반영 못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관별 분류코드가 다르고 산업통계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정책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보도



◆ 사실은

통계청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산업변화의 심층분석을 위해 산업총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산업(사업체)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UN의 표준산업분류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분류를 첨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 통계청은 물론 기타 통계작성기관에서도 산업분류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언급한 ‘기관별 분류코드가 달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 분류코드를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분산형 통계생산체제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복·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조정기능’ 강화를 통계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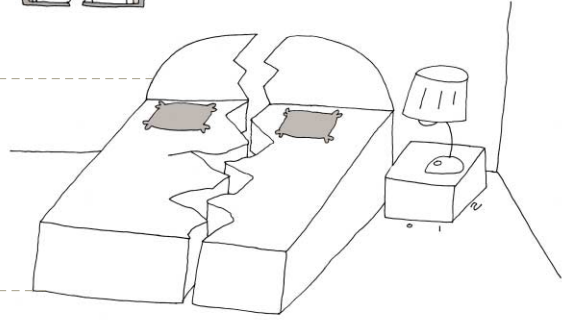
아울러 중분류·소분류 등 통계마다 다른 세분화 기준 역시 통계 작성 목적, 시의성,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해 최적의 통계를 작성할 방침이다.

부부 100쌍 중 47쌍이 갈라서는 대한민국?



◆ 보도내용

‘한국 부부 100쌍 중 47쌍 갈라선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나라의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했으며, 이는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헤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한국은 달갑잖은 이혼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도



◆ 사실은

이는 2002년도 한 해 동안 신고된 14만5,300쌍의 이혼건수를 그 해의 혼인건수 30만6,600쌍과 단순 비교해 나타낸 혼인에 대한 이혼비(此, Ratio)의 결과로 이혼율(率, Rate)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혼비는 이혼건수를 특정한 수치나 양과 비교해 백분율(%)로 나타내며, 상호 독립적일 때 주로 사용한다. 반면 이혼율은 이혼의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이혼건수를 그 기간 중의 연앙인구(한 해의 중간인 7월1일을 기준)로 나눠 천분율로 나타낸다.

한편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이혼율 지표는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유배우이혼율’* 등이 있으며, 이는 이혼건수를 분자로 하고 어떤 대상인구를 분모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이들 지표는 UN 기준으로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국가간 비교 때에는 산출방법이 간편한 조이혼율을 많이 사용한다.

조(粗)이혼율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1,000

일반이혼율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연앙인구×1,000

연령별이혼율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연령층 연앙인구×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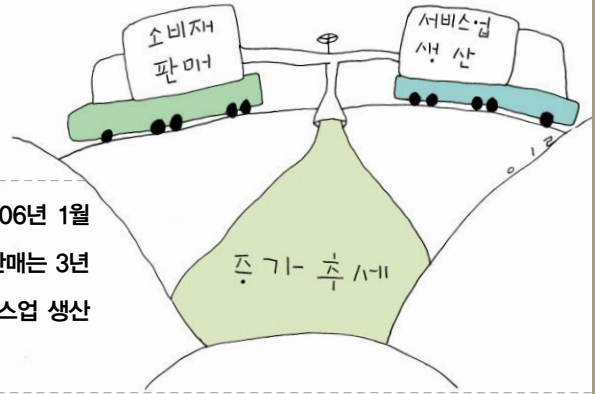
유배우이혼율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유배우 연앙인구×1,000

따로 노는 경기지표?

◆ 보도내용

‘따로 노는 경기지표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6년 1월 소비자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을 비교하면서 ‘소비재 판매는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데 비해 서비스업 생산은 3년여 만에 최대의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보도



◆ 사실은

이 기사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은 서로 포괄범위·개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소비자 판매는 주로 소매업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판매실적을 집계한 것이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자 판매는 물론 도매 판매,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오락·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비스업 개념을 도소매 판매, 음식 및 숙박업 정도로 축소했다.

둘째, 두 지표의 증감률을 비교할 경우 소비자 판매는 전월비(-3.9%)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6.9%)를 이용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전월비는 한달 전과 비교한 것이며, 전년동월비는 작년 같은 달, 즉 12개월 전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전월비와 전년동월비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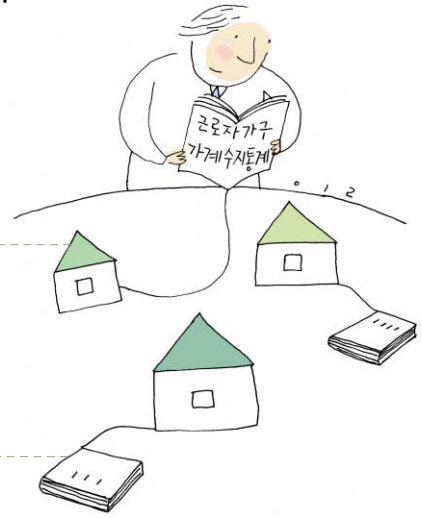
[단위 : %]

	2005. 10월	11월	12월	2006. 1월
소비재 판매 전년동월비(원계열)	3.7	6.8	9.6	9.4
소비재 판매 전월비(계절조정)	-0.3	2.9	3.0	-3.9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비	4.8	6.1	6.5	6.9
서비스업 생산 전월비	0.2	1.0	1.2	0.4

상·하위 근로 소득 격차가 44배나 된다는데?

◆ 보도내용

‘상·하위 10% 계층간 근로 소득 격차 44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계청의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491만 원으로 최하위 10% 계층(11만2,000원)보다 43.8배 많다’라고 보도



◆ 사실은

가계의 소득은 근로 소득·사업 소득·재산 소득·이전 소득 및 비경상 소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근로 소득의 비중이 높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 소득의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양쪽 가구가 모두 포함된 가구 가계수지통계에서 근로 소득만으로 소득 격차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로 소득 격차 비교는 근로자가가계수지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으로 비교한 2006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10% 계층과 하위 10% 계층간 소득 격차(10분위 비율)는 18.9배에 이르고 있다.

통계상식

통계표 부호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통계표 작성시 간단한 부호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주로 쓰이는 통계표 부호에는 '0(단위 미만)' '▽(시계열의 불연속)' '-(해당 숫자 없음)' 'p(잠정치)' '…(해당 숫자 미상)' 'e(추정치)' 'X(비밀보호를 위해 수치 대신에 표시)' 등이 있다.

정부 통계가 오락가락 한다는데?

▶ 보도내용

‘오락가락 정부 통계 누가 믿겠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과 서비스업 활동동향에서 발표되는 도소매 판매액 통계자료가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보도



▶ 사실은

산업활동동향에서 발표되는 도소매 판매액지수는 업종별 판매액 추이를 보기 위한 지표이며, 서비스업 활동동향(서비스업 활동지수)의 도소매업 부문은 업종별 부가가치의 흐름을 보기 위한 지표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 두가지 지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도소매업종의 업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업종별 판매액지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가 다를 경우 활동지수(부가가치 기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현실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작성된 다양한 통계지표들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확한 동향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계를 이용할 때에는 각 지표들의 작성방법, 지표들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이해 및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자료·월보 등에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빈곤층 자산이 월 46만 원씩 준다?

◆ 보도내용

‘빈곤층 자산 월 46만 원씩 줄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 1/4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자산이 46만 원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은 178만2,000원 증가해 자산격차가 심화됐다’고 보도



◆ 사실은

이 기사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사항(가계의 자산·부채 증감)을 보도하고 있다. 즉, 통계청은 가계조사시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부채 증감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조사·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언론은 통계청이 자산·부채 증감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조사에서 수집된 자산부채 변동내역은 가구의 실제 자산부채 변동내역 중 일부분으로 가계조사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가구의 실제 자산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통계로 대박상품 노린다”

통계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단기간 1억 병 판매 돌파, 출시 6개월 만에 전국 시장점유율 10%를 차지하며 주류업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A소주의 개발 뒤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음주 현황’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가 있었다.

A소주가 주목했던 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48.8%에서 2004년 49.9%로 점차 증가하는 것에서 향후 수년간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가 여성 음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객관적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 타깃 주류의 시장성을 확신한 A소주는 제품 개발 과정에 여성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소득 상위 20%의 '공적지출' 이 역대 최고라고?

◆ 보도내용

'소득 상위 20% 공적지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중 소득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공적지출 부담액은 월평균 95만5,000원으로 2004년(14.4%)에 비해 0.7%p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



◆ 사실은

통계청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과 지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되며, '비소비지출'은 다시 '공적지출(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료 등)과 사적지출(타가구 송금·이자 등)'로 나뉜다. 그러나 해당 언론은 기사에서 비소비지출의 약 37%를 차지하는 '사적지출'을 '공적지출'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위 20% 계층의 공적지출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도했다.

표에서 보듯이 상위 20%(5분위) 계층의 2005년 공적지출은 95만5,000원이 아니라 59만9,000원으로 소득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9.4%)에 비해 0.1%p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를 5구간으로 등분한 것으로 구간별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0%씩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이 1분위 계층이고, 가장 높은 쪽이 5분위 계층이다.

[단위 : 천 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

	1분위계층		2분위계층		3분위계층		4분위계층		5분위계층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소득	1,118	1,165	2,028	2,101	2,729	2,866	3,637	3,790	6,054	6,330
비소비지출	119	119	212	213	301	316	451	482	870	955
소득 대비	10.6	10.2	10.4	10.1	11.0	11.0	12.4	12.7	14.4	15.1
• 공적지출	62	61	130	130	191	200	290	305	572	599
소득 대비	5.6	5.3	6.4	6.2	7.0	7.0	8.0	8.1	9.4	9.5
• 사적지출	57	57	82	84	111	116	162	177	299	356
소득 대비	5.1	4.9	4.0	4.0	4.1	4.1	4.4	4.7	4.9	5.6

책값 지출 '제로' 수준?

◆ 보도내용

'한국인 책값 지출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구독료가 월 1만2,000원에 이른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들의 책 구입비는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도



◆ 사실은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4분기의 서적 및 인쇄물에 대한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1만397원으로 여기에는 신문·잡지·서적(단, 학생용 교과서·참고서·학습지 등은 제외) 등의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신문구독료를 1만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전체 가구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구당 월평균 신문구독료 지출액을 1만2,000원으로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서적 등의 구입비를 '서적 및 인쇄물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에서 신문구독료 1만2,000원을 뺀 채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로 서적구입비·신문구독료 등을 구분해 공표하는 연간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서적 및 인쇄물 관련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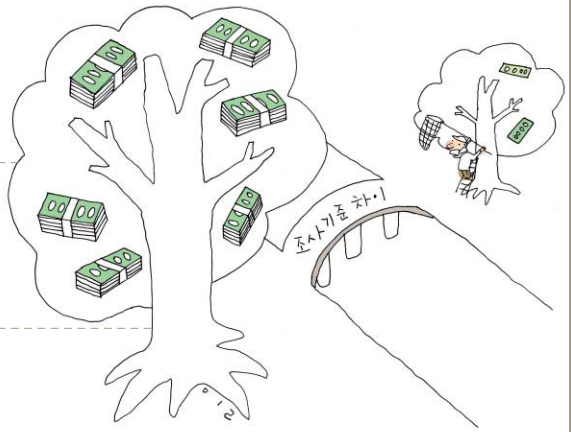
	서적 및 인쇄물	일간신문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지출액(원)	10,931	2,755	7,750	426
(구성비, %)	(100.0)	(25.2)	(70.9)	(3.9)



통계청 통계는 믿을 게 못된다?

▶ 보도내용

‘못 믿을 통계청 통계’라는 기사에서 ‘통계청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 소득 통계가 노동부 통계와 월 53만 원까지 차이가 나 오차가 심각하다’고 보도



▶ 사실은

통계간 조사대상·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해 오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에 해를 끼친 경우이다.

기사 내용 중 해당 언론은 ‘가계조사’의 ‘가구주’ 통계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사업장 근로자 전체’ 통계를 서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양 통계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가계조사’의 가구주 관련 통계에서 가구주의 대부분은 남자로 남자의 구성비가 약 83%인 반면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통계는 약 69%로 상호 격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를 제거한 채 통계청이 조사한 가구주 근로 소득과 남자임금을 비교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경우 가구주 근로 소득이 33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자임금 역시 336만 원 정도로 양 계층간 소득 차이가 거의 없다.

조사기간에서도 ‘가계조사’는 매월 조사된 결과를 평균한 것인 반면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매년 6월 한 달간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로 1년 중 몇 월에 조사하는가에 따라 야근일수 등의 차이가 발생,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가계조사’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서 통계청 소득 자료가 노동부 임금자료보다 적게 나타난다.

제3장

통계로 본 국정



일반적으로 통계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회를 진단하거나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않은 않다. 통계를 잘 활용한다면 상품의 판매 실적이나 미래 수요 등을 알 수 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사회의 모습·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혜안을 얻기도 한다. 통계에는 세상을 재볼 수 있는 잣대가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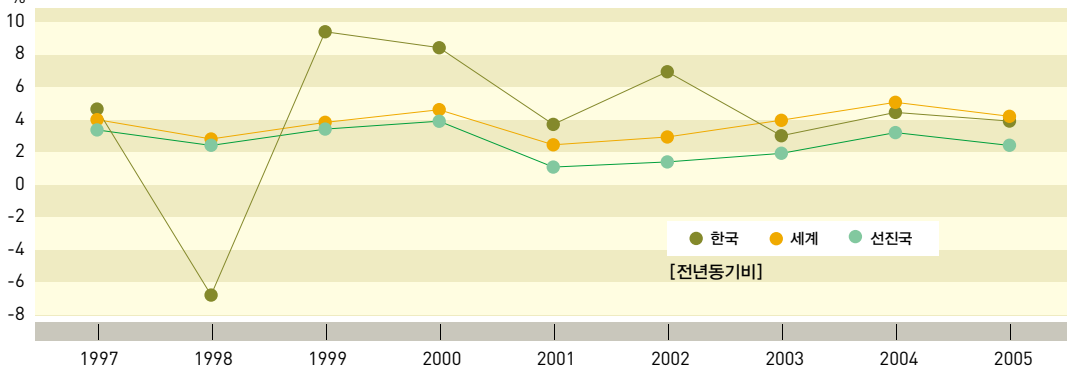
e-나라지표시스템(www.index.go.kr)에 수록된 주요 국가통계들을 중심으로 해당 통계 지수의 산출 원인 및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면을 살펴봤다.

경제성장률

Ⓣ GDP 및 GNI 성장률 변동 추이



Ⓣ GDP 성장률 국제비교



[전년동기비 | 출처 : 한국은행 「국민소득」]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 2/4	2005 3/4	2005 4/4	2006 1/4	2006 2/4
GDP성장률(%)	4.7	-6.9	9.5	8.5	3.8	7.0	3.1	4.6	4.0	3.2	4.5	5.3	6.1	5.3
GNI성장률(%)	2.7	-8.3	9.4	5.5	2.8	7.0	1.9	3.8	0.5	0.1	0.3	1.2	1.3	-

*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
 * GNI(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 : 실질 국내총소득에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반영한 소득지표

2003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기가 부진했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점차 빨라지면서 경기상승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의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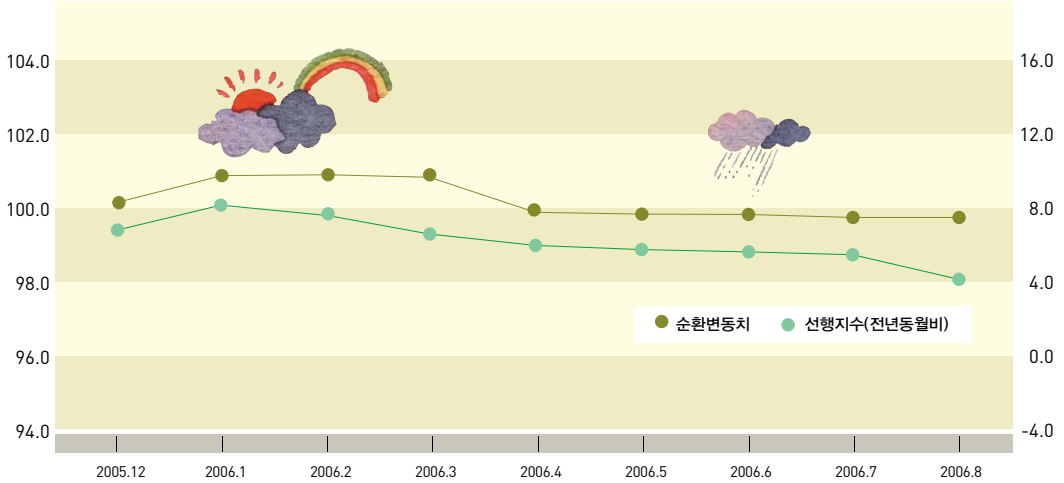
2003년 이후 극심한 내수부진은 2001~2002년 중 과잉소비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그동안의 가계부채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내수흐름이 정상화되고 성장률도 잠재수준을 나타내게 됐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어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 변동추이(2000년=100 기준)

순환변동치, P

선행지수, %



[2006년=100 기준 | 출처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2005.10	2005.11	2005.12	2006.1	2006.2	2006.3	2006.4	2006.5	2006.6	2006.7	2006.8
순환변동치(P)	99.5	99.9	100.1	100.8	100.5	100.5	100.0	99.9	99.8	99.0	99.1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5.3	6.0	6.8	7.5	7.1	6.6	5.8	5.3	4.8	4.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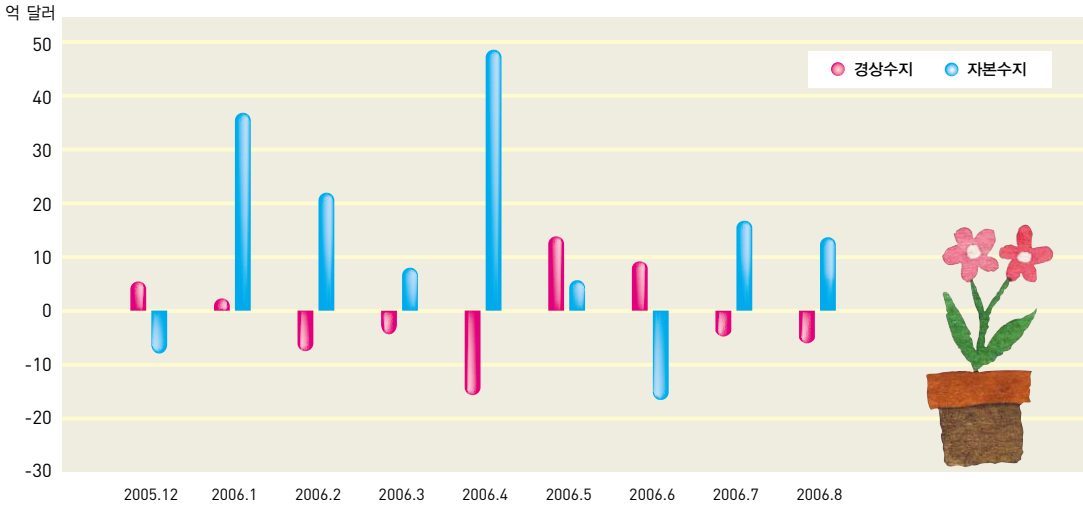
- * 순환변동치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말하며,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 5개로 구성되는 동행지표에서 추세를 제거해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이면 불황으로 분류된다.
- * 선행지수 : 경기선행지수를 말하며,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수의 하나이다.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각종 지표의 변화를 통해 보통 6~7개월 후의 경기를 알 수 있다.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2006년 8월 현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상승했으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4%p 하락했다.

7월 중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본래의 흐름으로 복귀하는 모습이지만, 7~8월 중 자동차 파업과 그에 따른 반사적 효과, 9~10월 추석이동 등 불규칙요인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표주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수지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 출처 : 한국은행 「국제수지동향」]

	2002	2003	2004	2005	2006.3	2006.4	2006.5	2006.6	2006.7	2006.8
경상수지	54	120	282	166	-4	-16	14	9	-4	-5
• 상품수지	148	220	376	335	29	19	28	27	16	16
• 서비스수지	-82	-74	-81	-131	-15	-14	-14	-12	-17	-21
자본수지	63	139	76	5	8	49	5	-17	17	12
• 투자수지	73	153	94	28	11	52	8	-14	20	14
• 기타 자본수지	-11	-14	-18	-23	-3	-3	-2	-3	-3	-2

* 경상수지 : 국제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치. 기업의 경우 통상의 영업활동에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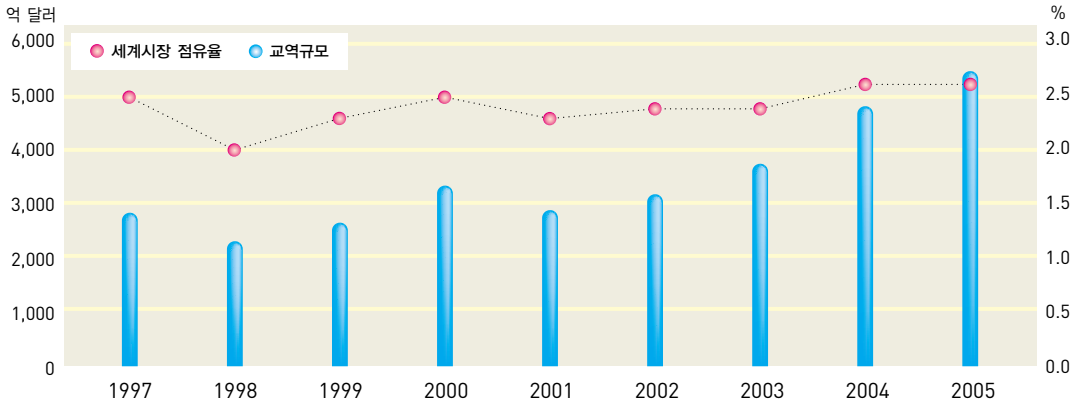
* 자본수지 : 국제 거래에서 유가증권의 매매나 자금의 융통과 같은 자본거래에 의해 생기는 수치. 자산·부채의 모든 변화를 가리킨다.

2006년 8월 현재 경상수지는 5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로는 13억 3,000만 달러 적자. 세부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원유도입 증가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소폭 흑자(15억7,000만 달러)에 그쳤고,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경비 및 특허권 사용료 지급 증가로 20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9월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에 따른 통관수출입차 확대(8월 4억 달러→9월 20억3,000만 달러), 휴가철 종료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등으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출입

연도별 교역규모 및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억 달러, % | 출처: 산업자원부 「수출입 실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	2,807.8	2,256.0	2,634.4	3,327.5	2,915.4	3,146.0	3,726.4	4,783.1	5,456.6
[세계시장 점유율]	(2.5)	(2.0)	(2.3)	(2.5)	(2.3)	(2.4)	(2.4)	(2.6)	(2.6)
수출	1,361.6	1,323.1	1,436.9	1,722.7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전년대비 수출증감률]	(5.0)	(-2.8)	(8.6)	(19.9)	(-12.7)	(8.0)	(19.3)	(31.0)	(12.0)
수입	1,446.2	932.8	1,197.5	1,604.8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전년대비 수입증감률]	(-3.8)	(-35.5)	(28.4)	(34.0)	(-12.1)	(7.8)	(17.6)	(25.5)	(16.4)
무역수지	-84.5	390.3	239.3	117.9	93.4	103.4	149.9	293.8	2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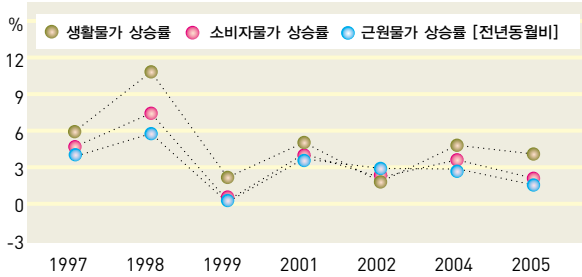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 상승·유가급등·원화강세 등의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2005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출입 부문에서 우리 경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교역규모 4,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1년 만인 2005년 5,456억6,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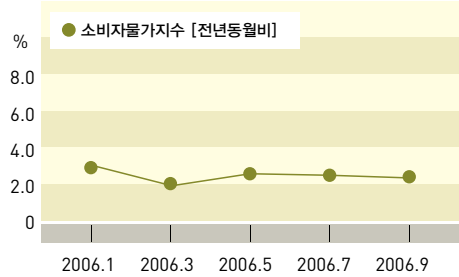
이에 힘입어 2005년 수출 규모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2,844억2,000만 달러(전년대비 12.0% 증가)로 세계 12위를 차지했으며,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1년 2.4%, 2002년 2.5%, 2003년 2.6%, 2004년 2.8%, 2005년 2.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전년동월비, %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자물가	4.4	7.5	0.8	2.3	4.1	2.7	3.6	3.6	2.7
• 농축수산물	3.8	6.1	7.3	1.9	6.3	6.2	5.9	8.9	1.8
• 공업제품	4.3	11.2	0.5	1.6	2.6	1.7	2.3	2.6	3.7
• 집세	3.3	0.5	-4.1	-0.5	4.1	5.8	3.5	1.6	-0.2
• 공공요금	5.1	9.5	2.2	7.1	7.5	-1.3	2.5	2.5	3.2
• 개인서비스	5.3	5.2	-1.0	2.0	3.1	3.7	4.5	4.1	3.2
근원물가	3.4	5.9	0.3	1.9	3.6	3.0	3.1	2.9	2.3
생활물가	6.1	11.1	2.4	3.7	5.1	2.5	4.1	4.9	4.1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절상·낮은 총수요 압력 등에 따라 2006년 9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가량 상승해 안정세를 지속했다. 또 소비자물가 조사품목(상품가격·서비스 요금 등 516개) 중 곡물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2% 상승했으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밑돌고 있으며, 기본 생필품(156개)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에 그쳤다.

주요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추석을 앞두고 채소류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0.3%)했으며, 공업제품 역시 석유류(1.0%) 등의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또 집세는 2003년 이후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0.7%)를 유지했으며, 공공요금은 유가상승에 따라 도시가스·택시료 등을 중심으로 상승(5.6%)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2006.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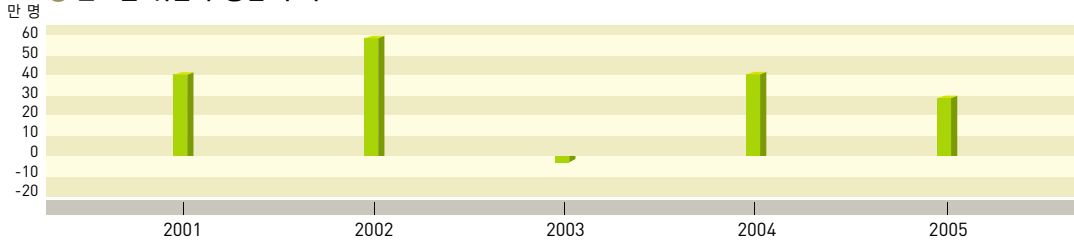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2.9	3.8	0.9	1.7	1.9	2.5

OECD 상대물가 수준(2006.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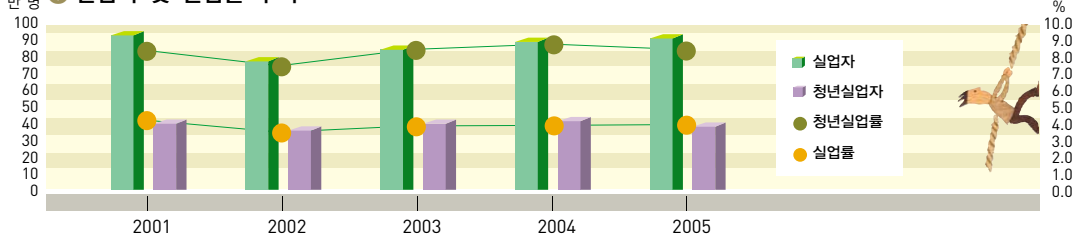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100	110	136	126	126	125

취업자수 · 실업자 · 실업률 · 청년실업률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3	2006.4	2006.5	2006.6	2006.7	2006.8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41.6	59.7	-3.0	41.8	29.9	27.2	30.7	28.6	25.5	26.3	31.8
실업자(만 명)	89.9	75.2	81.8	86.0	88.7	92.1	84.6	78.3	81.9	82.3	80.7
실업률(%)	4.0	3.3	3.6	3.7	3.7	3.9	3.5	3.2	3.4	3.4	3.4
청년실업자(만명)	41.3	36.1	40.1	41.2	38.7	39.3	36.9	33.0	36.9	38.3	33.7
청년실업률(%)	7.9	7.0	8.0	8.3	8.0	8.5	8.0	7.1	8.0	8.0	7.4

*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기준: 15~29세

2003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3만 명 감소했으나, 주된 일자리창출 동력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04년 42만 명, 2005년 30만 명, 2006년 1~8월 평균 30만 명가량 늘어 높은 상태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으로 감소했으며, 농업·어업도 산업 내 비중 축소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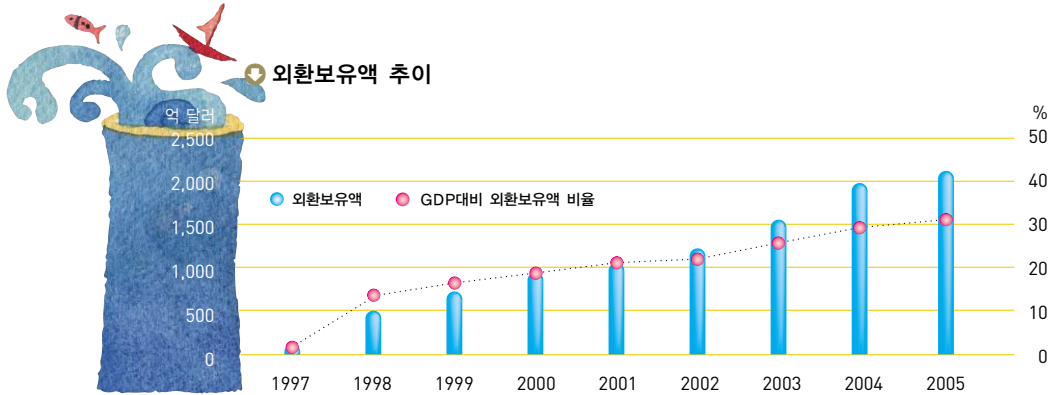
2006년 8월 현재 실업자는 80만7,000명, 실업률 3.4%, 청년실업률 7.4%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국제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이 실업률보다 크게 높은 것은 국제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업률 · 청년실업률 국제비교

[2005년 기준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OECD 평균
실업률(15~64세, %)	3.9	6.8	9.9	11.3	4.6	5.1	4.6	6.7
청년실업률(15~24세, %)	10.2	12.4	22.8	15.2	8.7	11.3	11.8	13.3

외환보유



[출처 : 한국은행 「ECOS경제통계시스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외환보유액(억 달러)	89	485	741	962	1,028	1,214	1,554	1,991	2,104
GDP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1.7	14.0	16.6	18.8	21.3	22.2	25.6	29.3	30.9

* 매 연도/분기/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한 국가의 대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282억2,000만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기업 및 금융의 성공적 구조조정, 국가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규모면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소규모 개방경제,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외화를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위기재발 방지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비율 역시 32.6%(2006. 3월말)로 국제 권장기준인 60%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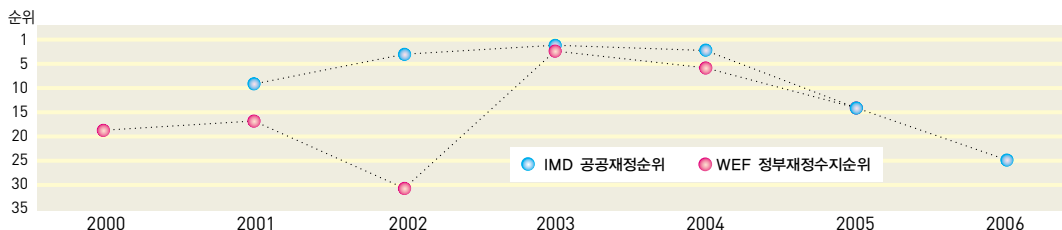
외환보유액 국제비교(2006. 9)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한국	인도	싱가포르
외환보유액(억 달러)	9,411	8,787	2,610	2,599	2,270	1,653	1,299
GDP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42.3	19.2	75.4	33.9	28.6	21.3	110.2

* 중국은 6월말, 싱가포르를 7월말 기준

IMD, WEF 재정건전성

IMD, WEF 재정건전성 순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IMD 종합순위	30	36	41	29	29	29	37	35	29	38
IMD 공공재정순위	-	-	-	-	9	3	1	2	14	25
WEF 종합순위	21	19	22	29	23	21	18	29	19	24
WEF 정부재정수지순위	11	17	49	19	17	31	2	6	14	-
WEF 정부부채순위	-	-	-	-	-	-	-	7	11	-

재정수지 흑자 감소와 국가채무 증가 등에 따라 IMD(국제경쟁개발원)와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IMD 공공재정 순위는 2004년 이전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05년 이후 순위가 하락해 2006년 현재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공공재정 순위의 급격한 하락은 설문항목인 ‘공공재정관리’ 지표가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한 것이다. 공공재정 관리란 ‘향후 2년간 재정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국내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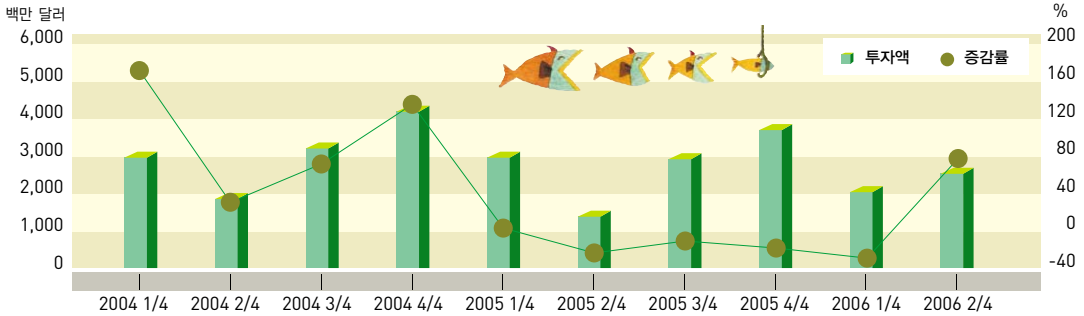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22.6%)은 최근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64.0%)·일본(168.1%), 독일(67.9%), 영국(44.1%) 등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건전성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IMD는 2006년 총 61개 경제권역(53개 국가)에 대해 총 312개 지표를 조사, 종합순위와 함께 4개 분야, 20개 부분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WEF는 총 117여개 국가에 대해 약 160개 항목 지표를 조사해 종합순위와 항목별 세부순위를 매긴다.

OECD 주요 국가의 IMD, WEF 재정건전성 순위 비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공공재정순위(IMD, 2006년)	41	44	48	54	30	25
정부부채순위(WEF, 2005년)	76	41	78	79	114	11
정부재정수지순위(WEF, 2005년)	92	73	86	86	113	14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산업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

	2004 1/4	2004 2/4	2004 3/4	2004 4/4	2005 1/4	2005 2/4	2005 3/4	2005 4/4	2006 1/4	2006 2/4
전체	3,049	2,008	3,374	4,356	3,128	1,512	3,054	3,870	2,210	2,707
[증감률, %]	(175.0)	(29.3)	(71.3)	(137.0)	(2.6)	(-24.7)	(-9.5)	(-11.2)	(-29.3)	(79.0)
농·축·수산 및 광업	0	0	0	0	3	0	0	0	0	0
제조업	450	1,192	1,514	3,057	581	575	919	1,001	1,006	522
서비스업	2,431	774	1,845	1,091	2,543	900	2,008	2,850	1,200	2,129
전기·가스·수도·건설업	168	42	15	209	1	37	127	19	3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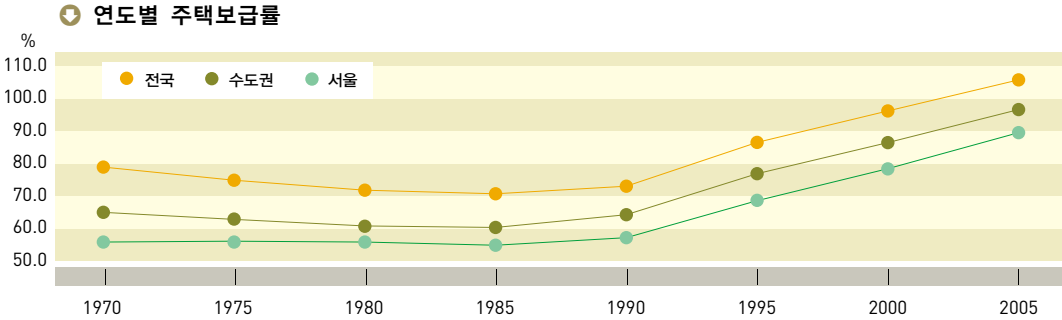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04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6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EU(385억5,000만 달러)가 우리나라 최대 투자유치 권역으로 부상했으며, 단일 국가로는 미국(353억9,000만 달러)과 일본(180억 달러)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06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난 49억1,7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 분야가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4~2005년간 2년 연속 110억 달러를 상회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정 궤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도착률(도착액/신고액)이 2003년부터 70% 이상 유지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내실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보급



[출처 : 건설교통부]

		1990	1995	2000	2005
전국 계	보급률(%)	72.4	86.0	96.2	105.9
	주택수(천 호)	7,357	9,570	11,472	13,223
	가구수(천 가구)	10,167	11,133	11,928	12,491
수도권	보급률(%)	63.3	76.7	86.1	96.8
	주택수(천 호)	2,798	3,859	4,731	5,782
	가구수(천 가구)	4,423	5,032	5,494	5,976
서울	보급률(%)	57.9	68.0	77.4	89.7
	주택수(천 호)	1,458	1,728	1,973	2,322
	가구수(천 가구)	2,518	2,541	2,548	2,588

1980년도 연간 20~30만 호에 불과하던 주택공급 실적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1990년 이후 연평균 56만 호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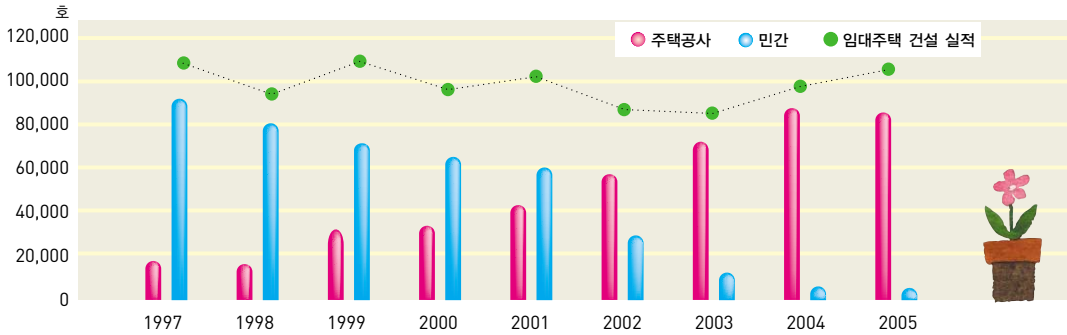
2001~2005년 사이에는 총 270만9,000호의 주택이 건설돼 1996~2000년(233만2,000호)에 비해 16.1%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2001~2005년에 전체 물량의 51%인 138만1,000호가 지어져 1996~2000년(112만8,000호)에 비해 22.4%가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도 1996~2000년 120만4,000호에서 2001~2005년 132만7,000호로 10.2% 늘었다.

주택수 역시 지속적인 공급으로 꾸준히 증가, 총 주택수가 2000년 1,147만2,000호에서 2005년 1,322만3,000호로 늘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통가구수(가구주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가구)는 2005년 1,249만 호로 2000년의 1,192만8,000호 대비 4.7% 늘어난 반면 산정에서 제외되는 2005년의 1인 가구수는 핵가족화·가족분화 등의 이유로 2000년 대비 42.5% 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택건설 확대에 힘입어 절대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됐으나, 일본 109.3%(2003년), 미국 108.5%(2003년), 프랑스 120.5%(1999년), 독일 100.6%(2002년)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임대주택

연도별 임대주택 건설 현황



[단위: 호 | 출처: 건설교통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108,728	93,795	109,417	95,932	102,557	86,586	84,768	97,226	105,787
지방자치단체	1,057	160	441	1,714	2,438	4,033	10,106	6,150	18,533
주택공사	15,941	13,958	30,115	30,953	40,908	55,403	64,686	86,845	84,476
민간	91,730	79,677	78,861	63,265	59,211	27,150	9,976	4,231	2,778

* 건설실적 : 사업계획승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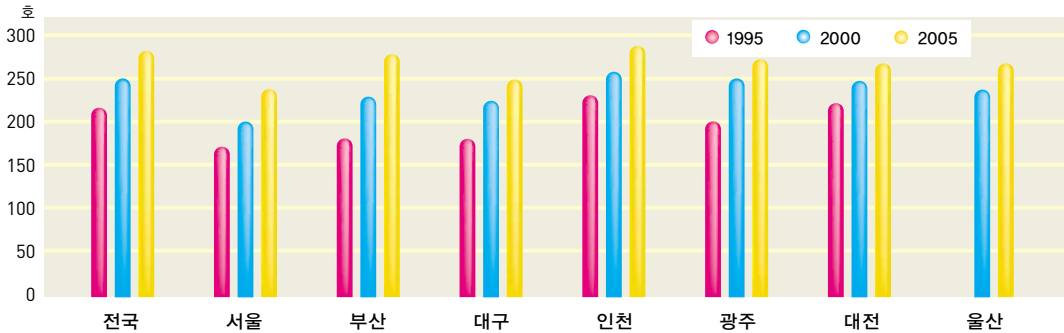
임대주택 건설은 매년 큰 폭의 변동없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1997년 1만5,941호에서 2005년 8만4,476호로 늘렸으며, 지자체도 1999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정부가 향후 10년간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민임대주택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200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70%를 차지했던 민간 부문은 1997년 9만1,730호에서 2005년 2,778호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주변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과의 갈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는 지자체, 2003년 9월 이후 1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 장기화로 참여 실적이 저조한 민간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5년 임대에 공공택지를 공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영세업체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점도 실적 저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택지·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 자기자본 투입이 가능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전국 주요 도시별 인구 1,000명당 주택 현황



[단위: 천 명, 천 호, 호/천 명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인구천명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인구천명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인구천명
전국 계	44,609	9,570.4	214.5	46,136	11,472.4	248.7	47,279	13,222.6	279.7
수도권	20,189	3,859.4	191.2	21,354	4,731.2	221.6	22,767	5,781.8	254.0
서울	10,231	1,727.9	168.9	9,895	1,973.2	199.4	9,820	2,321.9	236.4
부산	3,814	677.0	177.5	3,663	830.2	226.7	3,524	967.1	274.5
대구	2,449	436.4	178.2	2,481	545.0	219.7	2,465	608.9	247.1
인천	2,308	524.8	227.4	2,475	632.1	255.4	2,531	723.6	285.9
광주	1,258	249.1	198.1	1,353	338.1	249.9	1,418	379.3	267.5
대전	1,272	280.7	220.7	1,368	333.5	243.8	1,443	379.9	263.3
울산	-	-	-	1,014	239.0	235.6	1,049	276.6	263.6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주택수: 빈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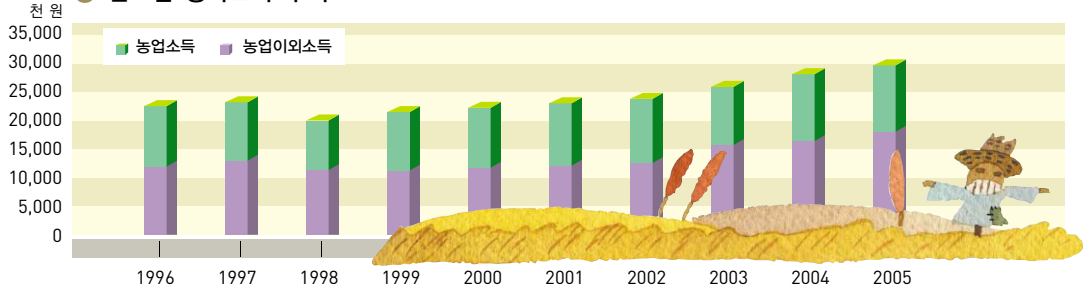
* 울산의 경우 1995년에는 경남에 포함(광역시로 분리되기 전)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1995년 214.5호, 2000년 248.7호, 2005년 279.7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0년도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1995년에 비해 34.2호, 2005년은 2000년에 비해 31호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총주택수도 2000년 1,147만 호에서 2005년 1,322만 호로 175만 호(15.3%)가 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2005년 인구 1,000명당 주택수(254호)가 전국 평균인 279.7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일본 423호(2003년), 영국 417호(2001년), 스페인 462호(2001년), 독일 445호(2000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가소득

연도별 농가소득 추이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가소득(천 원)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농업소득(천 원)	10,837	10,204	8,955	10,566	10,897	11,267	11,274	10,572	12,050	11,815
• 농업의존도(%)	46.5	43.4	43.7	47.3	47.2	47.1	46.1	39.3	41.6	38.7
• 농업소득률(%)	62.7	59.0	53.9	56.7	55.8	55.8	56.5	44.8	45.3	44.6
농업이외소득(천 원)	12,461	13,284	11,538	11,757	12,175	12,640	13,200	16,306	16,950	18,688

- *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 농업소득률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 * 농업이외소득은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계

2005년 우리 농가의 평균소득은 정부의 보조금(직불금) 지급, 농외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996년에 비해 30.9%(720만5,000원), 2004년보다 5.2% 증가한 총 3,05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영농형태별 농가 평균소득은 축산(4,406만1,000원), 특용작물(4,116만8,000원), 과수(3,281만 원), 채소(2,631만4,000원), 논벼(2,264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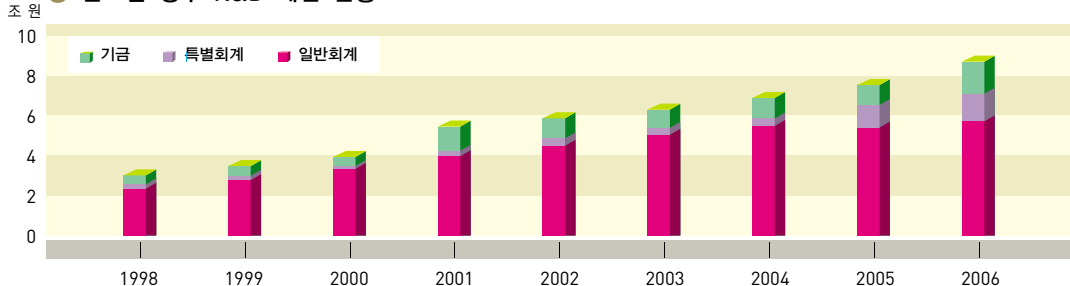
그러나 농업소득률은 노무비, 가축구입비, 비료·농약비 등 경영비가 늘어남에 따라 1996년 62.7%에서 2005년 44.6%로, 농업소득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1.9%가량 감소했다. 농업의존도는 2002년까지 45% 내외였으나, 2005년 38.7%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영농형태별로 분류한 농가수(2005 농업총조사 잠정치) 비중은 논벼 50.8%, 과수 11.5%, 채소 18.1%, 특용작물 2.1%, 축산 6.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농가소득 중 농업이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61.3%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대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소득 중 주요 국가별 농업이외소득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 82.6%, 일본 75.2%, 대만 78.1% 등이다.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연도별 정부 R&D 예산 현황



[단위: 조 원 | 출처: 기획예산처 「총괄재정규모통계집」]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R&D예산	3.3	3.7	4.2	5.7	6.1	6.5	7.1	7.8	8.9
[증감률, %]	-	(11.6)	(13.2)	(36.6)	(7.1)	(6.1)	(8.7)	(10.1)	(14.2)
일반회계	2.7	3.1	3.6	4.3	4.8	5.3	5.7	5.7	6.0
특별회계	0.2	0.2	0.2	0.2	0.3	0.3	0.4	1.0	1.2
기금	0.4	0.4	0.4	1.2	1.0	0.9	1.0	1.1	1.7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부 R&D예산이 연평균 13.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투자규모 또한 1998년 3조3,000억 원에서 2006년 8조9,000억 원으로 9년간 2.6배 이상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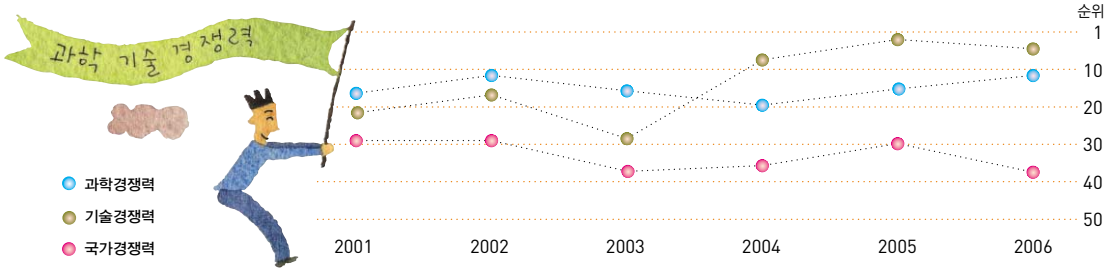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리의 연구개발 능력도 크게 신장돼 2006년 IM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과학 경쟁력은 세계 12위, 기술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과 해외논문·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R&D투자규모의 양적 확대와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연구에 대한 우리의 R&D투자가 미흡하고 R&D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보유한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과 투자성과 극대화, R&D예산의 전략적·효율적 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R&D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선순위에 기초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했다. 또 산하에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산업·인력·지역혁신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정부 R&D예산을 체계적으로 조정·배분하는 기능도 수행토록 했다.

IMD 과학·기술경쟁력

연도별 IMD 과학·기술경쟁력 순위



[단위 : 순위 | 출처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경쟁력	29	29	37	35	29	38
· 경제운영성과	15	32	40	49	43	41
· 정부행정효율	28	26	37	36	31	47
· 기업경영효율	35	27	45	29	30	45
· 발전인프라구축	26	23	30	27	23	24
과학경쟁력	14	12	16	19	15	12
기술경쟁력	21	17	27	8	2	6

* 국가경쟁력 : '기업이 국내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을 일컫는 말로 IMD는 매년 5~6월에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60여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운영 성과, 정부 행정 효율, 기업 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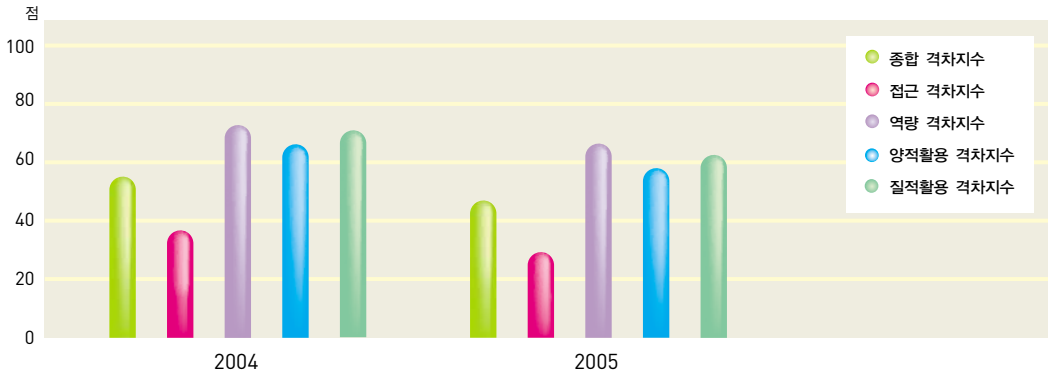
2006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12위로 전년도 대비 3단계 상승하고, 기술경쟁력은 6위로 4단계 하락했으나, 2004년 이후 세계 10위권 내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경쟁력은 R&D투자·인력·기초연구 및 과학교육·지적재산권 등 22개 평가지표(정량지표 17개, 설문지표 5개)로 구성되는데, 정량지표 중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6위~7위)'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인력(23위~24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높아져 과학경쟁력 순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경쟁력은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협력·첨단기술 수출 등 20개 평가지표(정량지표 13, 설문지표 7)로 구성되는데, 정량지표 중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인구 1,000명당 컴퓨터수' 등 9개의 순위는 전년과 같거나 상승했지만,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인구 1,0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등 4개가 하락하고, 설문지표 역시 모두 떨어져 기술경쟁력 순위가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보격차

📌 정보격차지수 현황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지수 조사」]

	종합 격차지수	접근 격차지수	역량 격차지수	양적활용 격차지수	질적활용 격차지수
2004	55.0	36.3	72.5	65.8	70.4 점
2005	46.7	29.0	65.8	57.8	62.3 점

* 정보격차지수는 0~100(점) 범위의 값을 가지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 수준이 큰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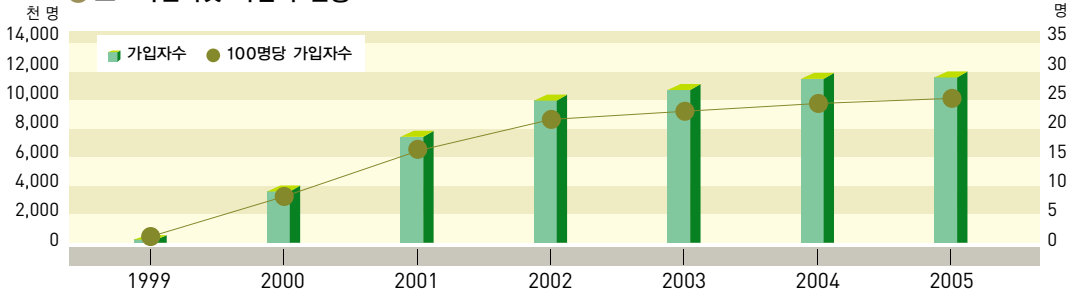
2004년 대비 2005년도의 정보격차가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읍면동 정보이용시설 설치, 취약계층에 대한 PC 보급, 500만 명 정보화교육 등으로 정보화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역량·활용 등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 종합 측정 요약치인 종합 격차지수가 2004년 55점에서 2005년 46.7점으로 전년대비 8.3점 감소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종합 정보화 수준이 2004년 45%에서 53.3%(100-격차지수 46.7)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정보격차 해소 중장기 정책 로드맵(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이기로 하고 △계층별로 세분화된 생활밀착 맞춤형 정보 활용 교육과정 개발·운영 △IT전문교육·창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개발 △장애인·노인 등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커뮤니티 개발·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및 다기능 정보 이용센터 운영 △취약계층 IT봉사단 확대 운영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출처 :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 보고자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가입자수(천 명)	278	3,870	7,806	10,405	11,178	11,921	12,190
전년대비 증감률(%)	-	1,292.1	101.7	33.3	7.4	6.6	2.3
100명당 가입자수(명)	0.6	8.2	16.5	21.8	23.3	24.7	25.4

1998년 6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행 이후 2002년까지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02년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굳건히 지켰던 1위 자리를 아이슬란드에 내주고 말았다.

이는 2000년 이후 '인터넷 수능 강의'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부가·별정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에 가세함에 따라 인터넷 가입자수가 급증했지만, 2003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가 25% 이상일 경우 대다수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위 하락이 주는 의미는 크지 않다.

당분간 가구수의 증가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포화의 어려움 탈피를 위해 인터넷 전화 및 IPTV(Internet Protocol TV; 인터넷 망을 이용한 TV) 등 인터넷 관련 결합서비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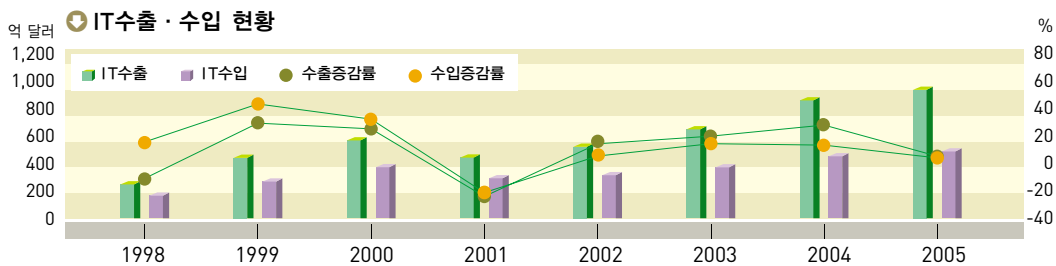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국제비교

[출처 : OECD 「Broadband Statistics」 2005. 12]

	아이슬란드	한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천 명)	78	12,190	4,113	1,350	1,725	1,174	1,006
100명당 가입자수(명)	26.7	25.4	25.3	25.0	23.1	22.5	21.9

IT산업 수출입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수출입동향」 「IT수출입 통계분석」]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계(억 달러)	276	485	631	485	571	706	937	1,023
	증감률(%)	-9.4	34.5	30.1	-23.2	17.8	23.5	32.8	9.2
수입	계(억 달러)	193	303	416	329	359	424	498	540
	증감률(%)	19.1	49.6	37.0	-20.7	9.0	18.2	17.2	8.4

2005년 IT수출이 고유가·환율 및 가격하락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전년도에 비해 9.2% 상승한 1,023억3,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998~2005년까지 연평균 16.1%로 성장해 위축된 내수를 만회하는 IT산업의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총수출 대비 IT수출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3%에서 2002년 이후 35~36%대로 성장, 국민경제의 든실한 ‘버팀목’으로 부상했다.

부분별로는 휴대전화가 2002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05년에 두 배가 넘는 25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도 320억 달러로 2004년 최대 수출 270억 달러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지 흑자 폭도 2004년 19억4,000만 달러에서 2005년 54억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6년 IT수출은 통신·정보·방송기기의 둔화 기조 속에 부품이 성장을 뒷받침해 9%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고성장에 의한 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해 1,124억 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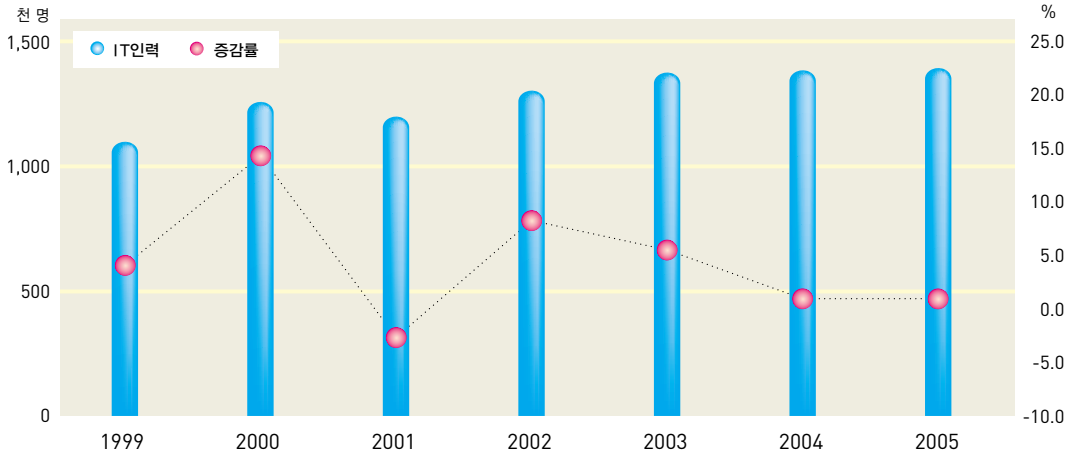
전체산업 대비 IT수출 비중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무역협회]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중(%)	27.3	36.6	32.2	35.2	36.4	36.9	36.0

IT산업 인력

연도별 IT인력 현황



[출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보고서」,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081	1,238	1,199	1,297	1,368	1,379	1,389
IT 인력 (천 명)	IT산업 인력	413	521	479	561	636	672	681
	IT관련 산업 인력	156	171	171	173	173	168	167
	타산업전산직 인력	512	546	549	563	559	539	541
증감률(%)		3.9	14.5	-3.2	8.2	5.5	0.8	0.7
전체산업 내 IT인력 비중(%)		10.4	11.3	10.5	11.0	11.1	10.8	10.7

* IT산업 인력 : IT인력 총종사자 - 자영업 - 일용직근무자

* IT관련 산업 인력 :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유통업 종사자

2005년 국내 IT인력은 2004년 대비 0.7% 증가한 138만9,000명으로 전체산업 종사자 중 10.7%를 차지했으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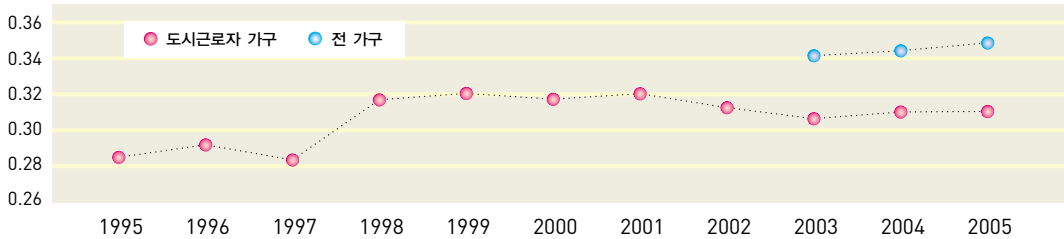


즉, IT인력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환율 하락 등 대외경제 불안과 IT 주요품목인 반도체·LCD가격 하락, PC생산 및 수출 급락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 PC공장 중국 이전, 중소기업체 부도와 PC생산 침체, 미국·일본·중국으로의 PC수출 부진,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과잉 등은 IT인력 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DMB·와이브로·디스플레이패널(LCD/PDP) 등 첨단 IT의 지속 성장과 위성전화기·위성방송의 수출 호조로 통신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IT인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분배(Gini계수)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도시근로자 가구	0.291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0.310
전 가구	-	-	-	-	-	-	-	0.341	0.344	0.348

* 전가구 : 자영자 및 무직 가구, 읍면지역 가구 등이 포함돼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지니계수가 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1997년 이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다가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소득불균형이 급격하게 심화됐다. 이어 2000년대 초엔 외환위기 극복 및 내수경기 호조로 인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3년 이후 경기부진으로 다시 상하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1998~1999년의 소득불균형 심화는 외환위기에 따른 중하위 계층의 소득 악화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2003년 이후의 부진은 경기회복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2000년 초의 개선은 외환위기 극복 및 내수경기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일본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영국보다는 아직 양호한 상태로 미국·호주 등의 경우는 1990년대 이래 소득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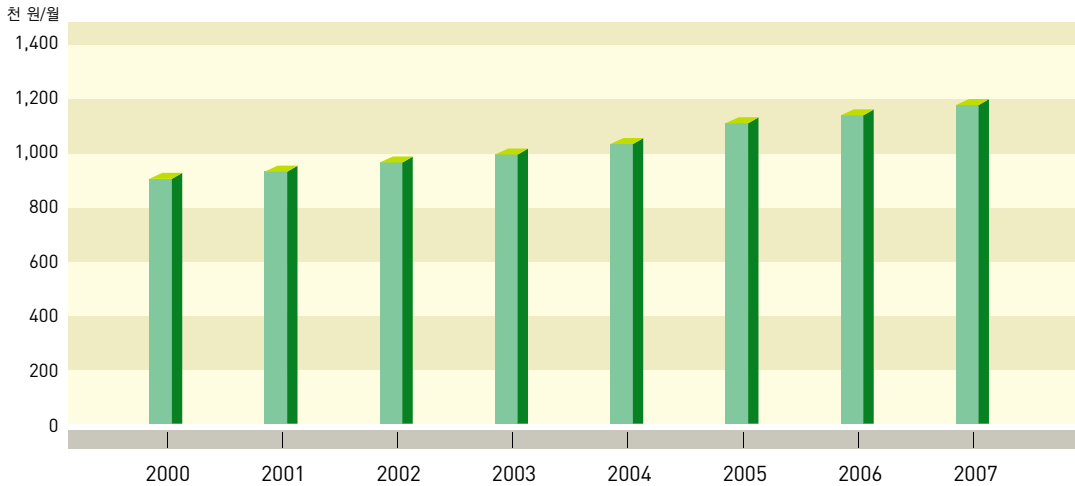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도시근로자)	0.291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0.310
한국	-	-	-	-	-	-	-	0.341	0.344	0.348
일본	-	-	-	0.301	-	-	-	-	-	-
미국	0.455	0.459	0.456	0.458	0.462	0.466	0.462	0.464	0.466	0.469
영국	0.360	0.370	0.370	0.380	0.380	0.380	0.390	0.370	0.370	0.360
호주	0.303	0.308	-	0.312	0.313	-	0.312	0.315	-	-

* 한국·일본·미국 : 세전소득 지니계수 * 영국 : 균등화(가구원수 차이 등 반영) 세전소득 지니계수

* 호주 : 균등화(가구원수 차이 등 반영) 세전소득 지니계수

최저생계비

연도별 최저생계비 변동 추이(4인 가구 기준)



[단위: 천 원/월 | 출처: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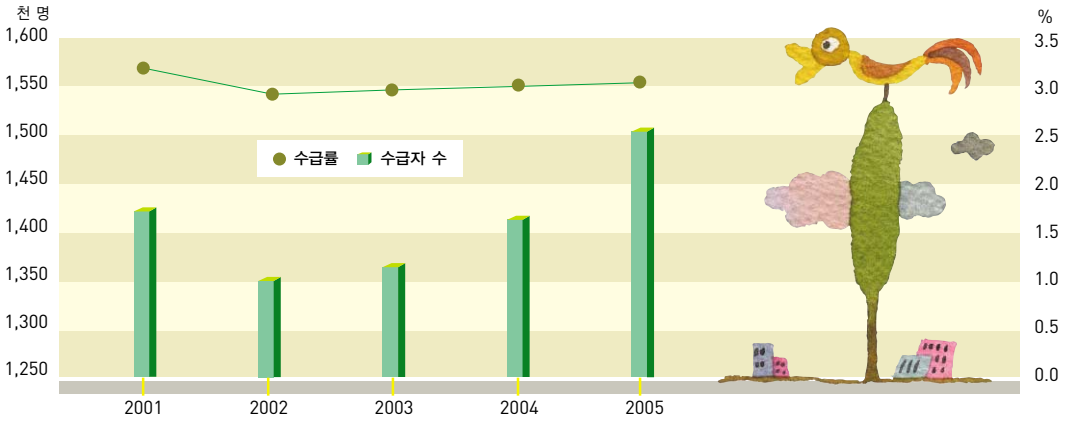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인 가구	324	334	345	356	368	401	418	436
2인 가구	537	553	572	589	610	669	701	734
3인 가구	738	760	787	810	839	908	940	973
4인 가구	928	956	990	1,019	1,055	1,136	1,170	1,206
5인 가구	1,056	1,087	1,125	1,159	1,200	1,303	1,353	1,405
6인 가구	1,191	1,227	1,270	1,308	1,354	1,478	1,542	1,610

200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6,000원, 2인 가구는 734,000원, 4인 가구는 120만6,000원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는 2006년도보다 3% 인상됐다. 그 밖의 가구의 경우도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해 1인 가구는 4.2%, 2인 가구는 4.8% 올랐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전문가·공익대표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01	2002	2003	2004	2005
수급자수(천 명)	1,421	1,353	1,377	1,425	1,515
수급률(%)	3.2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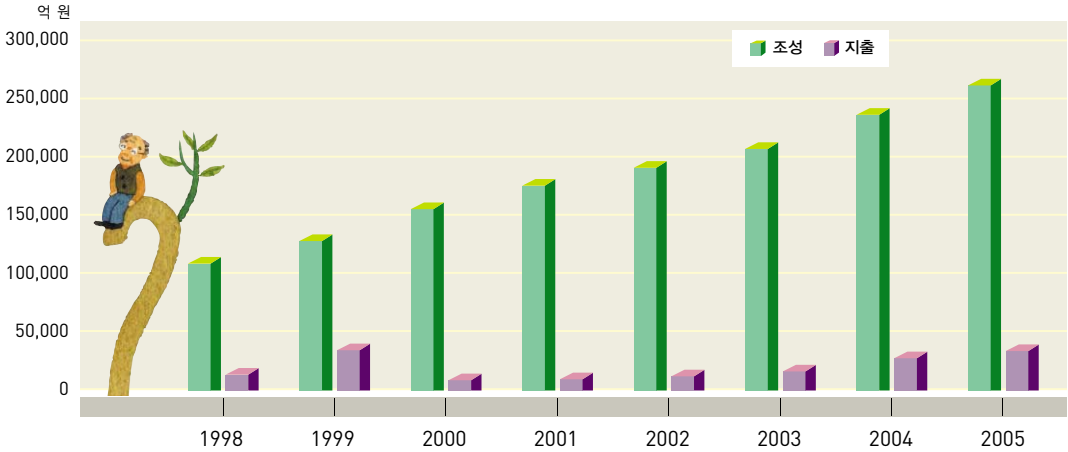
2000년 말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2001년 142만 명에서 2002년 135만 명으로 일시적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이후 가정해체·빈곤·실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52만 명으로 늘었다.

2002년 수급자 감소는 그해 11월에 실시된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합동 점검과 중앙자산 조사지원팀의 집중 점검에 따른 것으로 부적절한 수급 대상이 제거됐기 때문이며, 2005년의 수급자 증가는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 가구, 단전·단수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전면조사에 근거, 정부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급자를 발굴했던 것에 기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 시행됐다.

국민연금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출처: 보건복지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성	116,613	135,096	153,010	167,111	191,819	219,756	239,565	269,725
지출	24,506	39,724	16,707	16,718	20,358	24,632	32,469	39,578
기금 증가분	92,107	95,372	136,303	150,393	171,461	195,124	207,092	230,146
기금 운용	377,022	472,394	608,698	759,091	930,553	1,125,677	1,332,769	1,562,915

1988년부터 2005년 말 현재까지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약 182조 원. 연금급여 등으로 약 26조 원이 지출됐으며, 나머지 약 156조 원은 기금적립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연금가입자에 비해 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적립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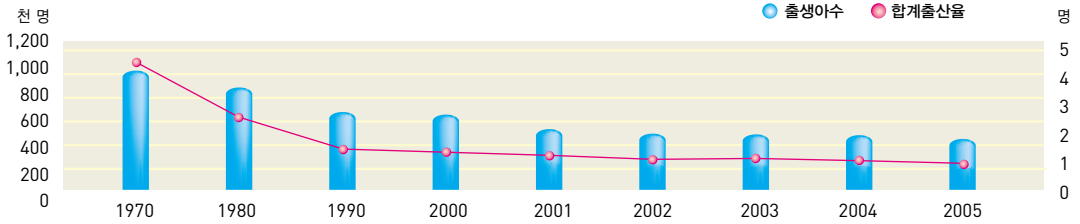
즉, 사업장 가입자를 비롯해 농어민·도시지역 자영업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된 연금제도 때문에 보험료 수입은 증가했으나, 제도 초기인 관계로 연금급여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기금운용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돼 적립금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인구가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급여 대체율 조정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납부 예외자 및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 해소 △투자다변화 등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출생아수(천 명)	1,007	865	659	637	557	495	493	476	438
합계출산율(명)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16	1.08

일반적인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인 2.1명까지 하락한 이후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1.3명 이하)로 진입해 2005년의 출생아수(43만8,000명)가 1980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도 1.08명으로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은 노동공급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는 물론 소비·투자 위축 및 재정수지 악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돼 2000년 5.10%에서 2010년 4.81%, 2020년 3.52%, 2030년 2.24%, 2040년대 1.48%대의 극심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관련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을 수립,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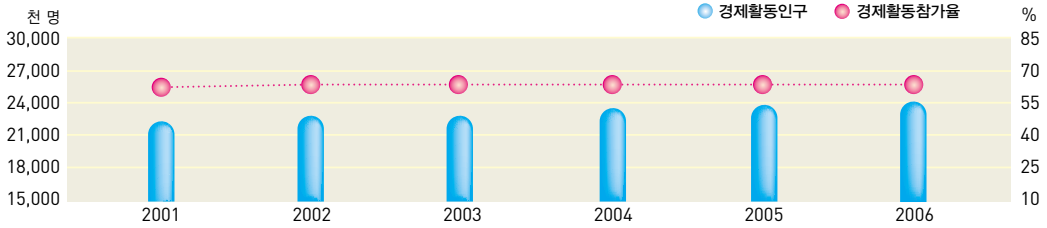
국가별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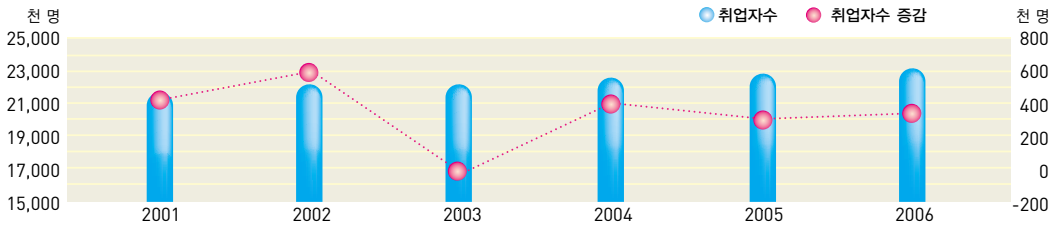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3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9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13	1.88	1.38	1.24	1.64
2003	1.19	1.29	2.04	1.89	1.34	1.29	1.73
2004	1.16	1.29	—	—	—	—	1.79
2005	1.08	1.25	—	—	—	—	—
1970~2004 감소명수	3.37	0.84	0.41	0.57	0.66	1.10	0.69

일반고용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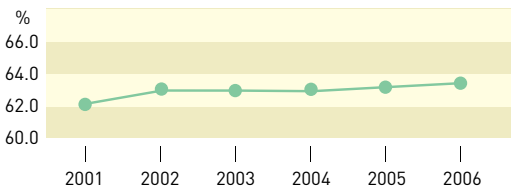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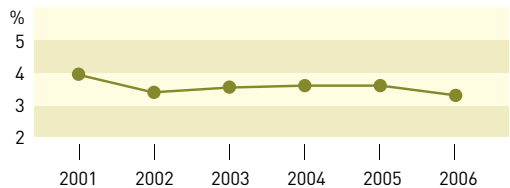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5세 이상 인구	36,579	36,963	37,340	37,717	38,300	38,854
경제활동인구	22,471	22,921	22,957	23,417	23,743	24,096
취업자수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330
(취업자수 증감)	416	597	-30	418	299	282
실업자수	899	752	818	860	887	766
비경제활동인구	14,108	14,042	14,383	14,300	14,557	14,758
경제활동참가율	61.4	62.0	61.5	62.1	62.0	62.0
고용률(15~64세)	62.1	63.3	63.0	63.6	63.7	63.9
실업률(15~64세)	4.0	3.3	3.6	3.7	3.7	3.2
구직단념자	117	69	90	100	125	112

- * 2006년은 9월 통계수치
- *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대비
- * 15~64세 고용률: OECD 기준

고용률



실업률



외환위기로 크게 감소됐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62.0%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2006년 9월 현재도 62.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은 1997년 63.7%에서 1998년 59.2%로 감소했으나, 2004년 63.6%, 2005년 63.7%, 2006년 63.9%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1.8%p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0.1%p 높은 반면 여성은 3.6%p 낮았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7.0%까지 급등했던 실업률은 2002년 3.3%, 2006년 3.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국가의 취업자 구성, 사회안전망의 구축 정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OECD 평가기준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실업률(2005년)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치 6.7%보다 낮은 3.7%를 나타냈다. 외환위기로 크게 감소됐던 일자리는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004년 42만 개에 이어 2005년 30만 개가 늘었다. 특히 2005년에는 서비스업종에서 월평균 36만8,000개의 일자리가(순)창출되면서 고용증가세를 견인했다.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구직단념자는 200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돼 2005년 12만5,000명으로 늘었으나, 2006년 9월 현재는 11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 정도가 줄었다.



통계상식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으로 노동공급에 대한 가장 순수한 측정치로 사용되며, 실질임금·사회보장수준·맞벌이·직업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수의 비중으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지표이며, 경기악화 등에 따라 실업률 변화(취업자 감소, 실망실업자 증가)가 거의 없을지라도 취업자의 감소를 반영해 하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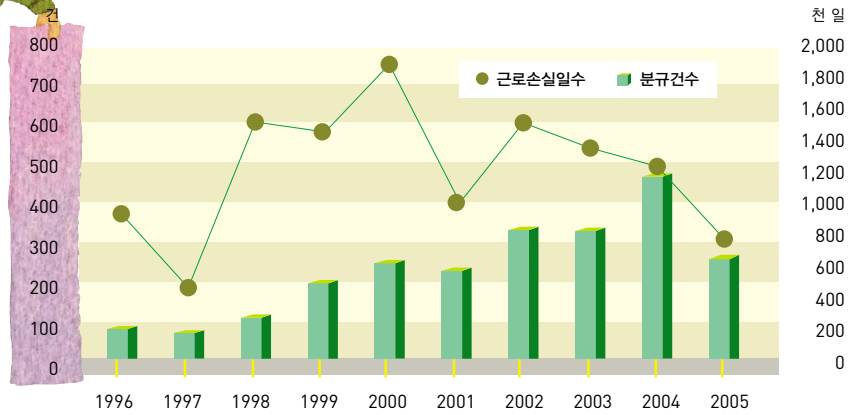
실업률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의미해 노동시장의 건강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요가 부족해 실업률이 상승했을 경우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뜻하지만, 노동공급이 증가해 실업률이 상승했을 때는 경제 전체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직단념자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 내에는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하며,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기 악화시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일수



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출처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분규건수(건)	85	78	129	198	250	235	322	320	462	287
근로손실일수(천 일)	893	445	1,452	1,366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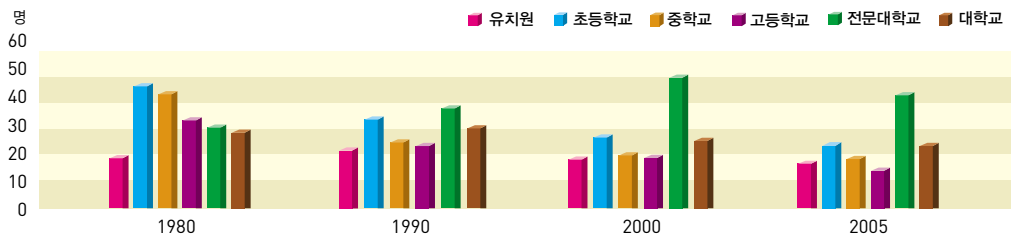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계획 철회와 택시운송 분야 분규 감소 등으로 2005년 12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전년도(462건)에 비해 37.9% 줄어든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근로자 한 명이 하루 8시간 파업할 경우 1일로 환산)도 전년도(119만 9,000일)에 비해 29.3% 감소한 84만8,000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의 감소는 △ '법과 원칙 및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정착 △국민경제·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산업현장의 합리적 노사관행 확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35건으로 일본(90건), 독일(48건), 스웨덴(20건), 영국(194건), 미국(29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노사분규 발생건수 국제비교(2001년)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235	90	675	2,131	48	20	194	29 건

교원 1인당 학생수

주요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1980	1990	2000	2005
유치원	19.9	22.4	19.5	17.5
초등학교	47.5	35.6	28.7	25.1
중학교	45.1	25.4	20.1	19.4
고등학교	33.3	24.6	19.9	15.1
전문대학	31.9	39.0	51.2	44.1
대학교	29.7	30.7	27.6	25.7

* 재학생 기준이며, 전문대학 및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대학원 학생수 및 초빙교원 미포함)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 수준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유치원의 경우 교원 1명이 가르치는 학생수가 1980년 19.9명에서 2005년 17.5명으로 줄어 교육여건이 좋아졌으며, 초등학교는 47.5명에서 25.1명, 중학교는 45.1명에서 19.4명, 고등학교는 33.3명에서 15.1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문대학과 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시 증가했다가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으로 2003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이 16.5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0.2명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주요 국가별 교원 1인당 학생수(2003년)

[출처: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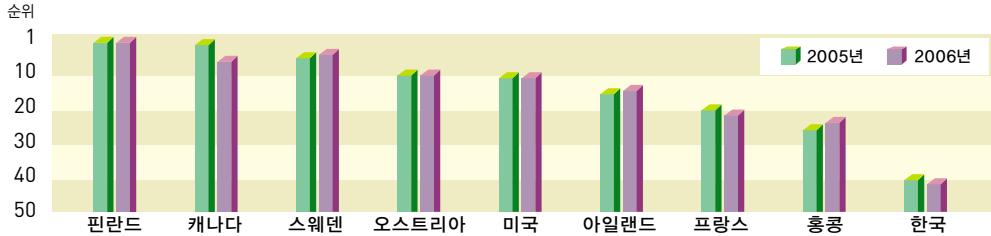
	유아교육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중학교)	후기중등교육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국	21.0	30.2	19.9	16.0	31.8
미국	15.5	15.5	15.5	15.6	15.2
일본	18.0	19.9	15.7	13.5	11.0
프랑스	18.8	19.4	13.7	10.6	17.6
영국	23.5	20.0	17.4	12.6	18.2
OECD 평균	14.4	16.5	14.3	13.0	14.9

* OECD의 교원 1인당 학생수 산출은 수업참여 교원만 대상으로 산출

*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자료가 없어 교육통계자료에 의거 산출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교육경쟁력

IMD 교육경쟁력 주요 국가별 순위



[단위: 순위 |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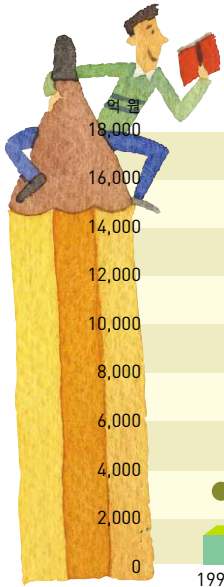
	2004	2005	2006
핀란드	1	1	1
캐나다	2	2	6
스웨덴	5	5	4
오스트리아	13	10	10
미국	11	11	11
아일랜드	10	15	14
프랑스	15	20	22
홍콩	37	26	24
일본	25	28	23
체코	38	30	31
영국	40	36	32
한국	44	40	42
멕시코	56	56	55
인도네시아	60	60	61

* 2003년의 경우 국가 순위가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 그룹(30개국)의 순위이므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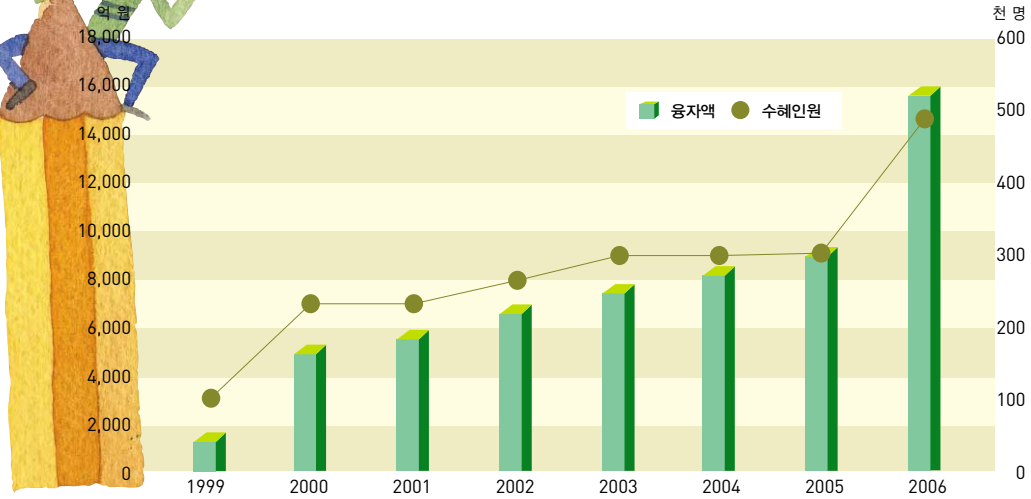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2004년 44위에서 2005년 40위로 4단계 상승했으나, 2006년에는 42위로 2단계 하락했다. 2006년의 순위 하락과 관련해 정부(국무조정실·산업연구원 분석)는 설문조사 시점(2006년 2~3월) 당시 경제·사회적 상황(국가 채무논쟁·유가불안정·양극화 논란·철도파업 등)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IMD의 평가지표별 분석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은 4위, PISA(OECD가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과학 1위, 수학 3위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48위, 교사1인당 학생수 초등 56위, 중등 41위,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여부 50위 등은 취약한 분야로 지적됐다.

학자금 대출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용자액(억 원)	1,652	4,585	4,850	6,631	7,842	8,234	8,923	16,000
수혜인원(천 명)	101	225	221	280	303	298	294	500
예산액(억 원)	128	451	423	650	747	912	1,272	1,240
집행액(억 원)	101	246	413	559	722	910	1,125	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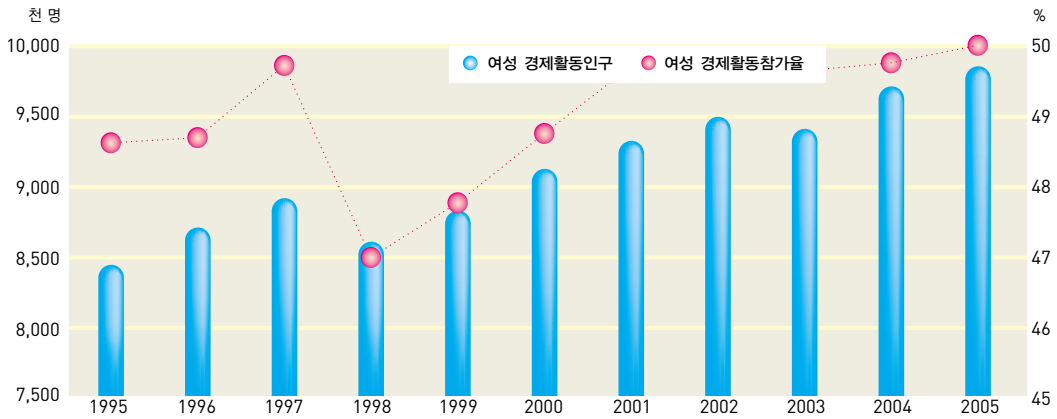
* 학자금대출 방식 : 이자차액 보전방식(1999~2005년 1학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 (2005년 2학기~)
 * 2005년에는 이공계 무이자 수혜인원 및 예산도 포함 * 2006년 수치는 계획적인 수치

학자금 대출은 지난 6년간 용자액·수혜인원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5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는 수혜 인원은 물론 용자금액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2005년 기준으로 29만4,000명에게 8,923억 원을 대출해 학기당 대출규모로서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교육투자격차 해소 및 수월성 교육확대 차원에서 성인학습자까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확대해 수혜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학자금 대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대출금 상환에 대한 기금 건전화 방안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현황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세 이상 여성인구(천 명)	17,382	17,675	17,965	18,223	18,451	18,664	18,859	19,042	19,220	19,405	19,683
여성 경제활동인구(천 명)	8,410	8,638	8,938	8,576	8,785	9,101	9,229	9,486	9,418	9,690	9,860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8.4	48.9	49.8	47.1	47.6	48.8	49.3	49.8	49.0	49.9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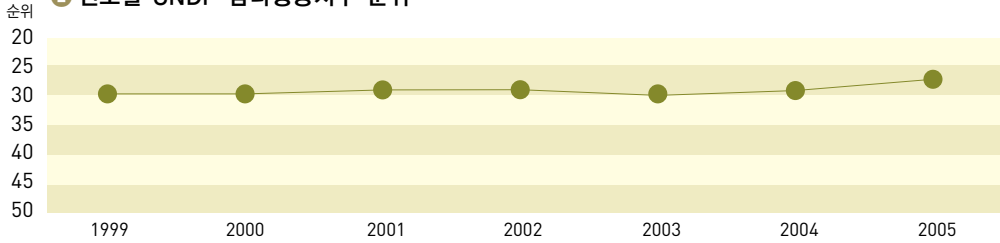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4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정 비율인 55%까지 끌어올리는 종합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급격하게 감소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 986만 명까지 상승, 약 1,000만 명에 근접했으나, 이 수치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곧바로 여성취업자의 순수한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분 중 대다수가 노동시장 재진입자(중·장년층 이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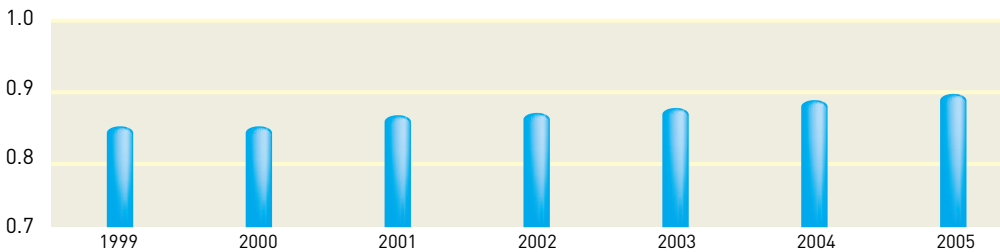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10년의 적정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2.2%,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1,073만1,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 국가의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시기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7.4%(15~64세)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주도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UNDP(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

연도별 UNDP 남녀평등지수 순위



연도별 UNDP 남녀평등지수 점수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순위	30	30	29	29	30	29	27
점수	0.845	0.847	0.868	0.875	0.873	0.882	0.896
평균수명(세)							
여	76.0	76.2	78.4	78.6	79.0	79.2	80.6
남	68.8	69.0	70.9	71.2	71.4	71.7	73.3
문자해독률(%)							
여	95.5	95.9	96.2	96.4	96.6	96.6	-
남	98.9	99.0	99.1	99.1	99.2	99.2	-
취학률(%)							
여	84	84	85	85	84	85	87
남	94	94	95	95	97	98	100
추정소득(US\$)							
여	8,388	8,342	9,667	10,791	9,529	10,747	11,698
남	18,708	18,529	21,676	23,884	20,578	23,226	24,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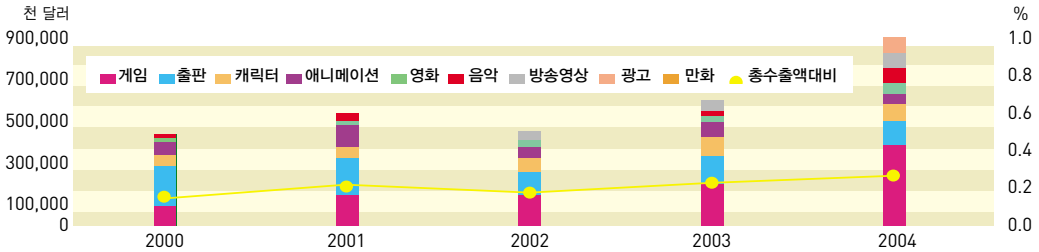
* 1995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성평등 관련지수로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개발해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매년 발표

UNDP(유엔개발계획)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5년 GDI(남녀평등지수)는 140개국 중 27위로 1999년에 비해 3단계 상승했다. 특히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GDI는 대부분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 면에서도 1995년에 0.78점이었으나 10년 사이 0.11점, 연평균 0.01점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녀간 추정소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남녀평등지수 향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문화산업 수출

연도별 문화산업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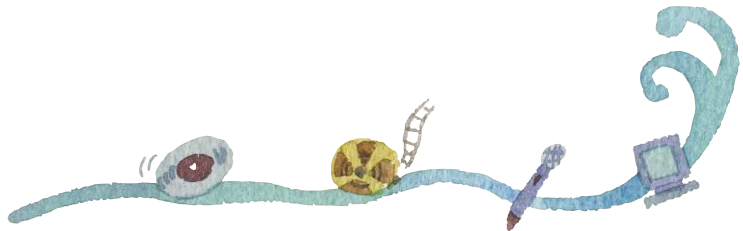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495,339	580,957	499,789	630,659	939,362
[총수출액대비, %]	(0.29)	(0.39)	(0.31)	(0.33)	(0.37)
영화	7,054	11,250	14,952	30,979	58,285
애니메이션	85,000	121,360	83,870	75,721	61,765
방송영상	13,111	18,920	28,813	42,135	70,306
음악	7,923	7,385	4,584	13,312	34,218
게임	101,500	130,470	140,796	181,543	387,692
출판	211,153	213,967	139,074	149,644	182,181
광고	—	—	—	—	20,761
캐릭터	69,228	76,920	86,000	116,313	117,336
만화	370	685	1,700	4,113	1,909
기타	—	—	—	16,899	4,909

* 기타 : 2003년은 인터넷 및 모바일 외 기타 부문, 2004년은 디지털교육 및 정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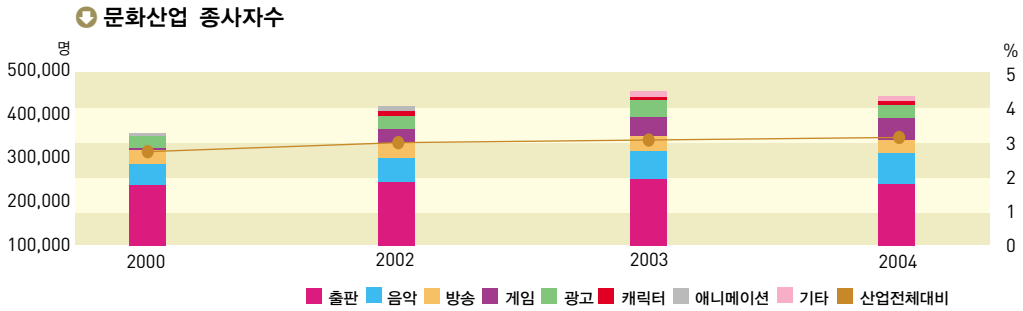
1990년대 말부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산업 수출액이 2000년 4억9,530만 달러에서 2004년 9억3,940만 달러(전체산업 총 수출액의 0.37%)로 급성장했다. 따라서 향후 문화산업분야 중 특히 방송·영상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게임산업이 4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요 수출 종목으로 급부상했고, 캐릭터 분야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문화산업 수입액 역시 급상승, 2004년 16억3,000만 달러를 수입해 전체산업 총 수입액의 0.73%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대다수 방송채널사업자(PP)가 프로그램 자체 제작 대신 해외 프로그램 수입을 선호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과열경쟁에 따른 수입프로그램 단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문화산업 고용



[단위: 명 | 출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2000	2002	2003	2004
계	364,331	425,274	463,233	458,926
[산업전체대비, %]	(2.68)	(2.91)	(3.15)	(3.1)
영화	6,471	6,568	38,108	31,898
애니메이션	8,591	9,338	5,385	3,600
방송	30,095	31,934	31,645	30,530
음악	50,507	56,067	62,555	66,870
게임	6,709	33,870	39,104	47,051
출판	236,562	244,002	237,347	234,271
광고	25,396	28,919	31,479	28,854
캐릭터	—	14,576	6,257	8,286
기타	—	—	11,353	7,566

* 2001년 문화산업 고용현황 통계는 미조사

* 2003년 이후 고용현황 항목별 자료는 통계조사범위 방법의 차이가 있어 전년도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

* 기타 : 2003년은 인터넷 및 모바일 외 기타 부문, 2004년은 디지털교육 및 정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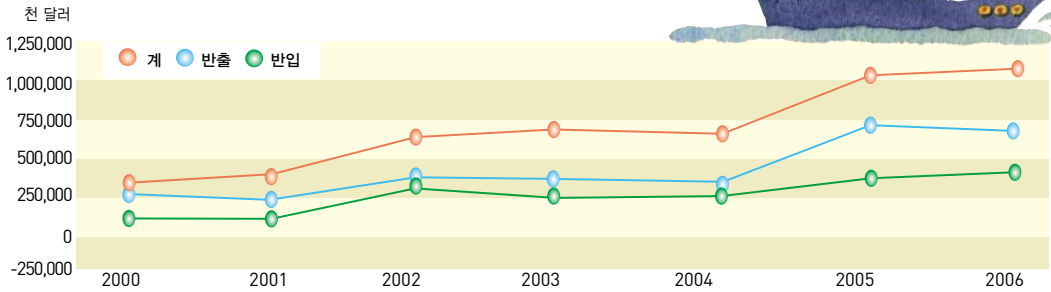
2004년 말 현재 문화산업 종사자수는 모두 46만 명(전체산업 종사자의 3.1%)가량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4년 말에는 다소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출판산업(만화산업 포함)이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음악(14.6%), 게임(10.3%), 영화(7%), 방송(6.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 고용증가는 문화산업분야의 수요 증대와 수출 활성화로 인한 시장 확대에 기인하며, 향후 각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및 다양한 상품의 등장, 해외진출 노력 강화 등으로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 증가추세 산업으로는 게임과 캐릭터, 고용 감소추세 산업으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임의 경우는 e스포츠의 활성화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창업의 원활, 캐릭터산업의 경우는 캐릭터 개발추세가 온라인 유통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게임·만화·애니메이션 등 유관 콘텐츠과의 연계가 다른 산업보다 강해 고용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용증가의 장점이다. 반면 영화산업은 제작의 대형화로 신규 제작자의 진입장벽이 높아 추가적 인력수급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우는 극장 애니메이션의 흥행실패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이 고용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남북 교역

● 남북 교역액



[단위 : 천 달러 | 출처 : 관세청 「남북한 통관자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반입	152,373	176,170	271,575	289,252	258,039	340,281	374,915
반출	272,775	226,787	370,155	434,965	439,001	715,474	713,571
계	425,148	402,957	641,730	724,217	697,040	1,055,755	1,088,486
실질교역수지	-61,315	-110,639	-197,419	-169,485	-168,017	-220,778	218,009

* 실질교역수지는 대북 무상지원(민간·정부), 경수로 건설, KEDO중유, 경제협력사업(개성·금강산·사회문화·기타) 금액을 제외하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의 교역액만을 비교한 개념

* 2006년 자료는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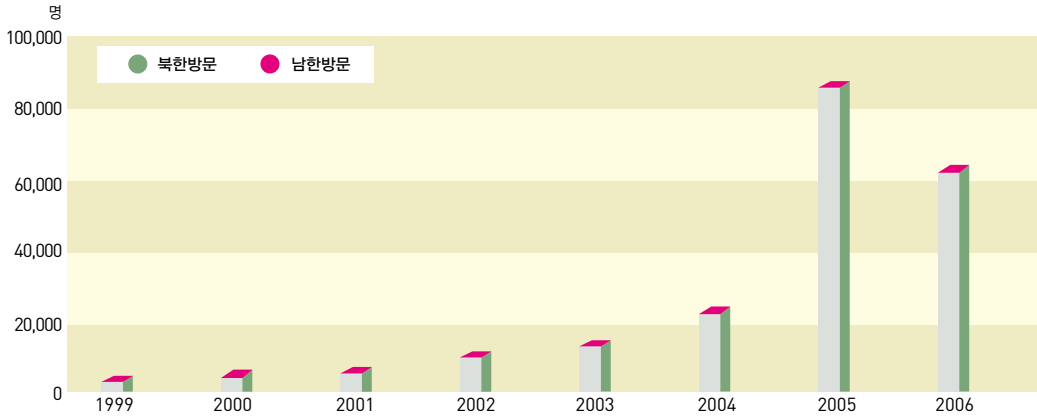
2006년 1~8월 중 남북교역규모는 모두 7억7,552만5,000달러로 전년동기(6억9,149만4,000달러)에 비해 12.2% 증가했다. 이 중 상업적 거래는 5억9,067만 달러(76.2%), 비상업적 거래가 1억8,485만5,000달러(23.8%)를 기록한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상업적 거래는 증가한 반면 비상업적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거래의 증가(34.7%)는 개성공단 건설 자재·장비 반출, 건설중장비 재반입 및 생상품 반입 증가(1억1,131만6,000달러→1억8,157만7,000달러),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증가(2억5,637만6,000달러→3억4,592만5,000달러)에 기인하며, 비상업적 거래의 감소(-26.9%)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지원(2억5,212만4,000달러→1억8,250만8,000달러)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는 일반교역 24.4%(1억8,938만5,000달러), 위탁가공교역 20.2%(1억5,654만 달러), 경제협력사업 31.6%(2억4,472만5,000달러), 대북지원 23.5%(1억8,250만8,000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교역업체수는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한 417개사로 이 중 일반교역 부문은 289개사, 위탁가공교역 부문은 106개사로 파악됐다. 교역품목수도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한 688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반교역은 292개 품목, 위탁가공교역은 181개 품목이다.

남북 인적교류

연도별 남북 인적교류 변동추이



[출처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명)	5,661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60,230
북한방문	5,599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59,395
남한방문	62	706	191	1,052	1,023	321	1,313	835

* 금강산 등 관광관련 인적교류 제외
* 2006년 자료는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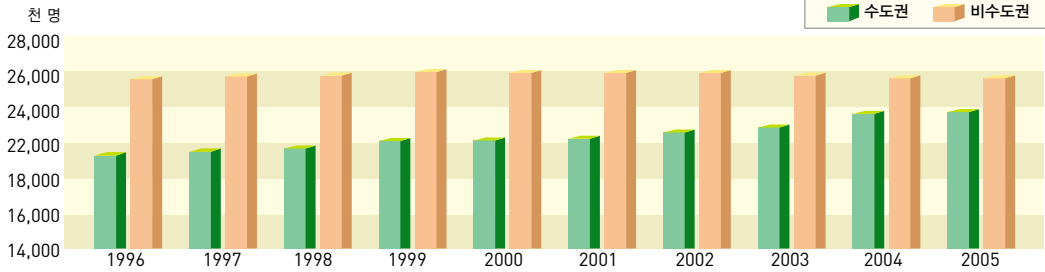
2005년 한 해 동안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모두 8만8,341명으로 분단 이후 2004년까지 60년간 남북을 왕래한 총 인원(8만5,4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사회문화 교류가 크게 진전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06년 7월말 현재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6만230명으로, 지난해 총 왕래인원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6년 총 남북왕래인원은 2005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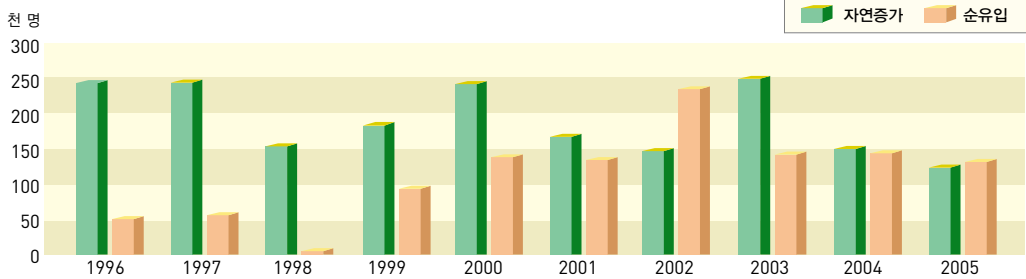
남북왕래인원 중에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115만5,244명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방북했으며, 개성 시범관광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총 3회에 걸쳐 1,634명, 평양은 2005년 10월 8일부터 1,280명이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중 | 인구

①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변화



②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출처 :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통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인구(천 명)	46,434	46,885	47,174	47,543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수도권 인구(천 명)	21,065	21,365	21,532	21,828	22,216	22,525	22,877	23,240	23,527	23,782
[수도권 비율, %]	[45.4]	[45.6]	[45.6]	[45.9]	[46.3]	[46.6]	[47.2]	[47.6]	[48.0]	[48.3]
비수도권 인구(천 명)	25,369	25,520	25,642	25,715	25,761	25,764	25,641	25,584	25,526	25,486

* 수도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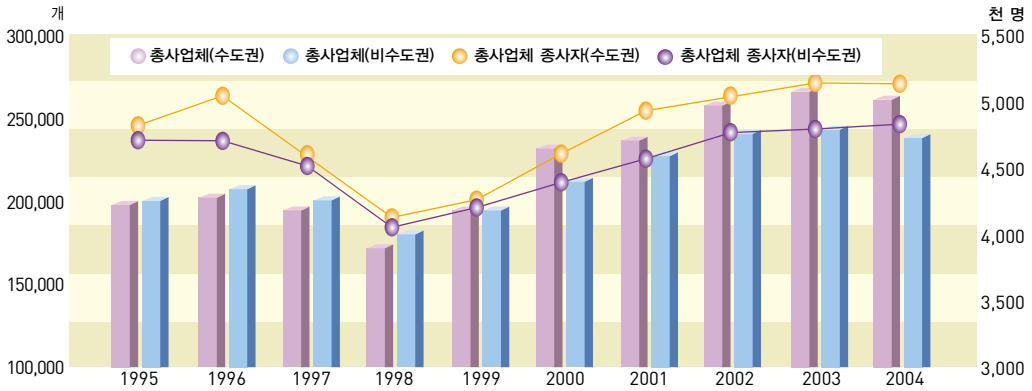


2005년 말 현재 집계된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4,926만8,000명)의 48.3%인 2,378만 2,000명으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늘어난 인구(283만4,000명) 중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정체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은 수도권내 자연적 증가와 전입으로 인한 순유입(사회적 증가요인)이 거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런던권(26.0%), 파리권(19.0%), 뉴욕권(7.7%), 동경권(27.2%)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집중 | 업체

수도권·비수도권의 총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천 명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사업체수	393,893	407,560	391,922	347,193	388,941	442,655	469,873	496,591	507,745	495,421
	종사자수	9,468	9,742	9,087	8,142	8,411	8,953	9,467	9,802	9,892	9,971
총사업체 수도권	사업체수	195,398	201,400	193,315	169,673	195,075	229,756	242,246	255,931	265,022	259,081
	종사자수	4,782	5,037	4,585	4,114	4,224	4,579	4,901	5,052	5,133	5,151
비수도권	사업체수	198,495	206,160	198,607	177,520	193,866	212,899	227,627	240,660	242,723	236,340
	종사자수	4,686	4,705	4,502	4,028	4,187	4,374	4,566	4,750	4,759	4,820

수도권내 총사업체 및 제조업체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총사업체 종사자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높으나, 제조업체 종사자수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게 나타났다. 수도권 총사업체 종사자의 증가는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아래 표에서 보듯 최근 10년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3년부터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해 2004년에는 근소하나마 역전 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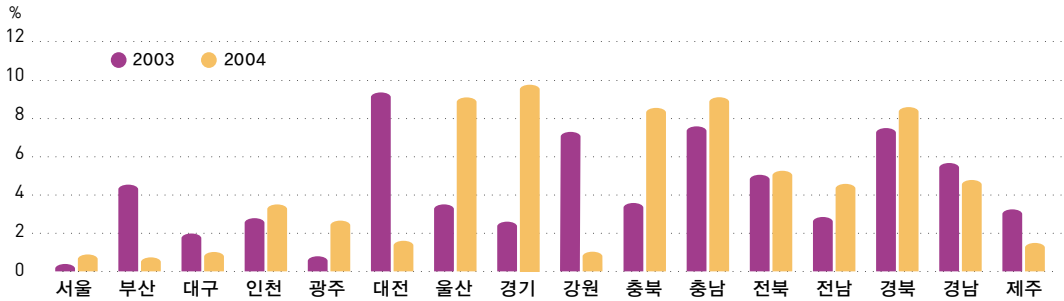
1인당 GRDP 비교

[단위 : 10억 원 | 출처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892	989	1,060	1,017	1,110	1,205	1,286	1,414	1,496	1,603
수도권	943	1,028	1,082	1,030	1,136	1,245	1,329	1,461	1,516	1,582
비수도권	850	957	1,042	1,007	1,087	1,170	1,248	1,372	1,483	1,622

지역내총생산(GRDP)

시도별 성장률



[단위: 실질성장률, % | 출처: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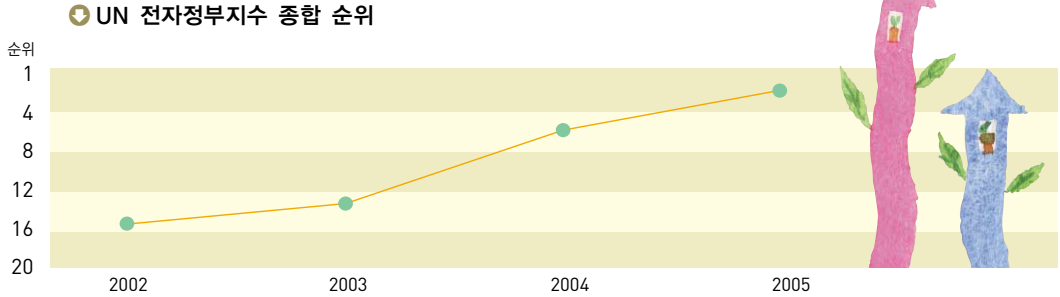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10.0	8.1	4.0	7.7	3.3	5.0
서울	5.2	8.4	3.3	8.0	0.3	0.8
부산	8.0	5.4	6.7	5.0	4.5	0.7
대구	5.3	6.4	0.2	4.2	2.0	1.0
인천	11.2	6.2	4.6	9.2	2.8	3.5
광주	9.8	9.1	3.0	8.9	0.7	2.6
대전	6.8	7.4	3.6	6.3	7.3	1.6
울산	11.1	7.1	0.2	11.0	3.5	9.1
경기	18.6	12.2	5.2	10.7	2.6	9.8
강원	4.6	7.0	-0.4	5.0	7.2	1.0
충북	14.2	8.4	0.1	7.7	3.7	8.6
충남	14.2	7.9	2.8	8.9	7.5	9.2
전북	10.1	4.9	1.7	3.2	5.1	5.3
전남	3.1	3.2	2.7	3.6	2.8	4.6
경북	13.8	9.5	6.6	7.6	7.3	8.6
경남	9.3	5.0	8.9	4.8	5.7	4.8
제주	3.3	8.3	7.6	5.5	3.2	1.3

* 매년 12월말 전년도 잠정자료 발표. 국제·지방세 등 기초통계자료를 보완해 익년 6월말 확정자료 DB수록

2004년도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786조 원으로 서울 179조 원, 경기 156조 원, 경북 56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실질성장률은 전국이 평균 5.0%를 기록한 가운데 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반도체 등) 및 자동차 제조업에서 호조를 보인 경기가 9.8%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9.2%), 울산(9.1%)이 뒤를 이었다. 최근 6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중 전국 성장률(6.3%)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9.8%), 경북(8.9%), 충남(8.4%), 충북(7.0%), 울산(6.9%), 경남(6.4%)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제조업(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명목 GRDP 비중은 200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했으나, 2003년부터는 소폭 감소했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도권의 명목 GRDP 비중(%)	47.0	47.8	48.2	48.7	48.1	47.3

UN 전자정부지수



[단위 : 순위 | 출처 : UN경제사회국 「각국 전자정부 관련자료」]

	2002	2003	2004	2005
지수종합	15	13	5	5
웹수준지수	—	18	4	4
정보통신인프라지수	—	10	12	9
인적자원지수	—	20	1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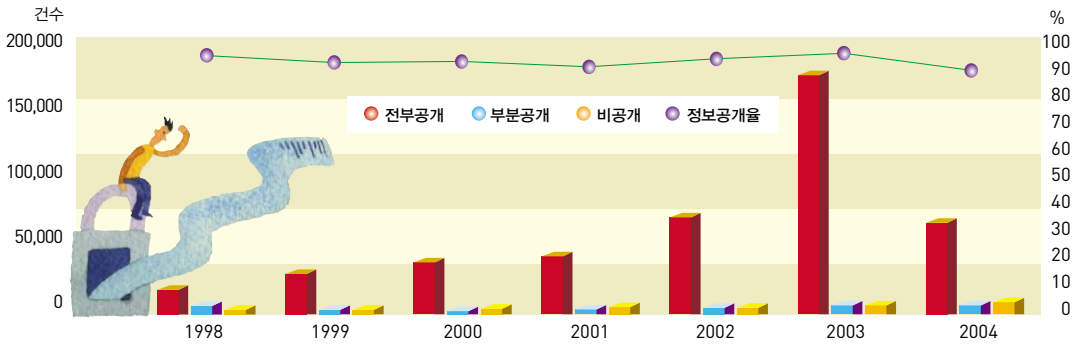
* 2002년부터 지수평가, 발표(2002년에는 세부지표 미발표)
 * 191개국 중 한국의 순위

UN이 세계 19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는 UN 전자정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함께 최상위권을 형성하며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2005년 현재 UN 전자정부지수 순위는 미국이 선두를 질주하는 가운데 덴마크가 2위, 스웨덴 3위, 영국 4위에 이어 우리나라가 5위에 올랐다. UN 전자정부지수는 웹수준지수·정보통신인프라수·인적자원지수 등 3개 하위지수를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웹수준 지수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4위)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처리분야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하다.

그러나 웹수준에 비해 정보통신인프라 및 인적자원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수준 지수(Web Measurement Index)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반적 능력 측정 △국가대표 포털사이트 또는 정부 공식홈페이지와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인프라 지수(Telecom Infra Index)는 △전자정부의 선행조건인 기본 정보통신관련 인프라를 측정하고 △6개 지표(PC보급률·인터넷이용자수·유선전화보급률·온라인이용자수·이동전화보급률·TV보급률)의 가중평균으로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을 측정한다. 또 인적자원지수(Human Capital Index)는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 지적능력 측정 △2개 지표(15세 이상 성인 식자율·취학률)의 가중평균으로 국민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반영한다.

행정정보 공개

연도별 행정정보 공개율 추이



[단위 : 건 | 출처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보공개율(%)	94.7	93.0	92.5	90.9	94.4	95.8	89.9
처리건수	25,475	41,484	58,711	80,165	102,319	186,087	96,187
전부공개	21,020	35,580	50,470	66,845	89,474	170,828	78,089
부분공개	3,108	3,005	3,839	5,997	7,064	7,443	8,412
비공개	1,347	2,899	4,402	7,323	5,781	7,816	9,686

* 작성기준일 : 매년 12월말

정보공개법 시행 첫해인 1998년 약 2만5,000여 건이었던 정보공개 처리건수가 2004년에 약 9만6,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보공개율 또한 2004년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을 상회했다. 2004년도의 정보공개율 감소는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건수를 2004년도부터 정보공개처리 결과 집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은 대부분 공개로 결정되고 청구 즉시 현장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과 달라 정보공개 통계 합산에서 배제한 것이다.

한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집계된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 사생활 보호(18%)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16%) △업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방지(8%) △영업상 비밀(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율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